

주체90(2001)

6.15주간

6.15Weekly

제25호 (12월 7일~12월13일)

새해맞이 행사, 공동선언 실현 돌파구

진실 드러나다,
공안세력 청산하고 반공반북과 결별해야

노작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발췌)

이회창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보람찬 투쟁의 한해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25호 (12.7~12.13)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발췌)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주체44(1955)년 4월



조선인민은 일제의 장구한 식민지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자기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우리 조국 남반부에 상륙한 미군은 첫날부터 일제통치기구를 재생시키고 조선인민의 극악한 원쑤인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하며 해방 직후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과 애국적 민주역량을 탄압하며 조선인민의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반대하면서 식민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은 복잡성과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게 되었다.

우리 당은 우리 조국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북반구에서 위대한 쏘련군대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들을 이용하여 조국통일의 기초로 되는 강력한 혁명적 민주기지를 창설하는 길에 들어섰다.

모든 혁명에 기본문제는 주관에 관한 문제이다. 해방후 우리 당의 영도 밑에 북반부의 노동계급은 근로농민과의 튼튼한 동맹에 기초하여 모든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계층들과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였다.

인민 자체가 자기 손으로 조직한 인민정권은 가장 선진적 계급인 노동계급을 주도적 역량으로 하고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을 자기 주위에 집결하면서 외래 침략세력을 반대하며 조선인민의 극악한 원쑤인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과 지주 및 예속자본가들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민주제도를 계속 공고히 할 기본임무를 규정하고 전체 인민으로 하여금 그 실천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였다.

인민정권은 우리 당의 영도 밑에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세력을 숙청하고 제국주의세력을 부식하던 지주계급의 토지를 몰수하여 광범한 농민들에게 무상분여하는 역사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산업, 철도운수, 체신, 은행 등을 몰수하여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켰으며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농업현물세에 관한 법령 등을 채택하였으며 사법 및 교육기관의 민주화를 실시하였으며 선진적 민족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무력을 창건하였다.

이리하여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은 완전히 수행되었으며 북반부인민들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점차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위한 북반부인민들의 투쟁은 미제와 리승만 도당이 도발한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 투쟁은 오랜 시일을 요하게 되었다.

전쟁은 우리 인민이 창설한 민주제도와 우리 인민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으로 되었다.

북반부에서의 민주혁명의 승리와 경제건설에서 북반부인민들이 달성한 성과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우리 나라의 혁명원천지인 북반부 민주기지를 보위한 위대한 역량으로 되었다.

그러나 해방 1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우리 나라는 통일되지 못하고 국토와 민족은 양분되어 있으며 남반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아직도 남조선에 남아 있으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적극 반대하면서 계속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며 이승만 괴뢰군대를 증강하는 한편, ≪북진통일≫을 떠벌이고 있다.

최근 미제와 이승만 역도가 조작한 ≪한미 군사경제원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미제의 식민지 약탈정책은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이승만역도는 ≪귀속재산≫을 외국자본가, 예속자본가, 모이간상배들에게 방매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오늘 남반부의 산업은 거의 폐쇄되고 노동자들은 혹심한 노예적 노동과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촌은 황폐화되었으며 지주들의 착취는 더욱 혹심하여 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며 인민들은 털끝만한 자유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고 있다.

국토의 양단, 민족의 분열과 남반부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는 전체 남반부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단일한 우리 나라의 정상적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계단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며 그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남반부인민들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



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는데 있다.

남반부에 있어서 혁명의 동력은 노동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미제국주의 및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광범한 소자산계급이며 적지 않는 민족자본가들까지도 반제반봉건적 투쟁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

혁명의 적은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며 그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이다.

만일 세계반동세력의 괴수인 미국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조선인민은 이미 오래전에 국내반동세력을 타도하고 전조선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리 나라에서 몰아내지 않고는, 그의 주구 이승만도당을 숙청하지 않고는 혁명의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혁명은 한편으로는 반제국주의적 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며 다른편으로는 남반부에서 아직 지주의 압박과 착취를 받고 있는 광범한 농민들을 해방 할 반봉건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 남반부의 제조건, 특히 남반부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 혁명은 간고하고도 장기성을 띤 전민족적 투쟁을 통하여 완수될 것이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물리치며 그 사촉하에 있는 이승만 매국역도를 타도하고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모든 혁명역량을 집결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오늘 쏘련을 비롯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단결은 불패의 것으로 강화발전되는 반면에 제국주의 진영은 그 자체의 내부모순들과 호상간의 알력으로 인하여 점점 더 쇠약하여 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국제주의기치에 더욱 충실하며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떻게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하며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과 사회단체들을 더욱 강화하며 남북반부인민들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역량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시켜 그들을 미제와 리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혁명투쟁에로 궐기시켜야 하며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역량으로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역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전진시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은 북반부 사회경제발전의 필연적 요구로 된다.

민주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공업과 농업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소상품경리와 자본주의적 경리는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에서 지배적인 개인농민경리는 농업의 급속한 복구와 장래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다.

농민경리와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생산력의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으며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 수 없다.

북반부와 인민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경제와 협동경제는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소상품경리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경리에 결정적 영향을 주면서 필연적으로 그것들을 사회주의적 개조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계단에 있어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경제적 실정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사회발전의 필연적 요구로서 제기하고 있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남반부인민들, 특히 노동자, 농민과 광범한 소자산 계급에 커다란 추동력으로 될 것이며 심지어 남반부의 일부 민족자본가들과의 통일전선의 결성을 돕는 힘으로 될 것이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는 비단 조국통일을 쟁취하는 결정적 역량으로 될 뿐 아니라 조국통일이 실현된 이후에 남반부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보장함에 있어서도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될 것이다.

...

세기와 더불어

5. 마촌작전

≪세기와 더불어≫ 제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

일본 지배층은 조선과 만주대륙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행을 두고 도덕적으로 심심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반성은 수치도 아니고 굴욕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성적으로 재정돈하는 과정이며 완성에로 이끄는 과정이다. 눈을 감는다고 역사가 스스로 인멸되는 법은 없다. 일본이 구가하고 있는 고도성장의 비단이부자리 위에 조선민족의 피가 배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도 이방인들의 철화에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누이와 딸들이 강점군들에게 정조를 강탈당하는 국난을 체험하지 않았던가.

적들은 만신창이 되어 허덕이면서도 검질기게 늘어붙어 장기전을 기도하였다. 인원도 무기도 식량도 공급받을 데가 없는 우리를 장기전의 함정에 빠뜨려 얼어 죽고 굶어 죽게 하려는 것이었다.

전국의 결정적인 전환만이 유격대와 유격구 인민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유격구방위전과 함께 적들의 종심에서 강력한 교란작전을 벌이는 것만이 유격구와 인민들을 보위하는 유일한 출로였다.

원래 나는 왕청에 온 초기부터 유격구 사수에만 매달리는 방어일변도의 경향을 반대하였다. 다시 말하여 적들의 역량이 분산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 적들을 습격 소멸하고 적들이 역량을 집결하여 우리한테로 쳐들어올 때에는 반대로 우리가 역량을 분산하여 도처에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법을 피실격허의 전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활동해야 근거지도 고수하고 부대의 역량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만당과 현당에 앉아 있던 대부분의 간부들은 적들이 집결해 쳐들어올 때에는 무턱대고 우리가 집결해서 적을 방어해야 유격구도 지켜내고 인민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기와 더불어



이 두 가지 이론이 전술상 문제로 대치되어 나중에는 어느 주장이 진실로 맑스주의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비맑스주의적인 것인가 하는 어마어마한 논란까지 빚어냈다.

그들이 우리의 이론을 비맑스주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현실도피적이고 투항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하므로 우리도 그때 날을 세워가지고 적구교란론의 정당성을 완강하게 고집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역량을 집결한다고 하여도 적을 감당할 만한 힘은 못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민들을 사방에다 피난시키고 유격대도 일부만 남겨 여기저기서 뚱땅거리게 하자. 그러는 사이에 유격대의 나머지 역량은 분산되어 적 후방을 교란시키자. 가령 총을 멘 대원 10명이 적구로 나간다고 하자. 그 열 사람이 30~40명의 총없는 청년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적의 약한 고리들을 자꾸 답새기면 총도 얻고 먹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많은 동무들이 당시의 정황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일부 완고덩이들은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슨 활동연조를 뽐내면서 ≪젊은 사람들이 투쟁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다. 적이 쳐들어올 때 군대가 유격구 밖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은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군대만 살고보자는 사상이다≫라고 터무니없는 까박을 붙였다.

유격근거지가 초토화되고 희생자와 전사자들이 속출하자 나는 동장영, 이상묵, 송일을 비롯한 특위와 현의 간부들을 만나 적후교란전을 벌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마지막 계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죽고 인민들도 다 죽고 만다. 가면 어데로 가겠는가? 자꾸 쫓겨서 산으로만 들어가는데 수림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쫓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인민들을 보호할 수도 없다. 동무들이 유격대와 같이 적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막연한 일이다. 당장 오늘밤이라도 유격대를 서너 패로 나누어 적구에 내보내야 한다. 적구에 나가서 후방근거지들을 몇 군데만 답새기면 ≪토벌대≫들이 반드시 소왕청에서 퇴각한다.≫

동만의 다른 유격구들도 그 무렵에는 소왕청과 비슷한 고전을 겪고 있었다. 훈춘 사람들은 밀려서 금창과 화소포 쪽으로 갔고 왕우구 사람들은 다홍왜와 삼도만 방면으로, 화룡현 사람들은 처창즈 방면으로 각각 이동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도간부들은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였다.

그래서 나는 적구교란론을 재차 상정시키고 ≪군대는 내가 책임졌으니 내 결심대로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 다음 유격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방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의 뒤통수도 쳐야 한다. 누가 적구로 가겠는가? 갈 사람은 나를 따라 서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절반만 적구로 나가고 절반은 유격구에 남아 인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적구로 나갈 사람들은 나와 같이 오늘 밤중으로 포위망을 뚫자. 포위망만 뚫으면 살길이 열린다. 적의 거점들과 지탱점들을 연이어 들부수면 소문이 난다. 소문을 내면서 여기에서도 치고 저기에서도 치면 후방이 녹아날까봐 산골안에 들어왔던 ≪토벌대≫들이 다 달아난다.≫

이렇게 되어 유격대는 두 패로 갈라졌다. 한 패는 최춘국의 지휘하에 십리평을 지키고 다른 한 패는 내가 데리고 적구로 나갔다. 1,500여 명에 달하는 근거지 인민들은 공청원들의 인솔하에 라자구에 소개하였다.

우리는 병중에 있는 동장영을 묘구 방면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할 데 대한 임무를 최금숙에게 주고 예비식량까지 다 모아서 그의 배낭속에 넣어주었다.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상면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으로 유격대의 한개 편대를 데리고 배밀이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적 후방으로 깊이 들어갔다.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적 후방은 오히려 텅 비어 있었다. 우리가 도시 주변의 첫 부락에 들렀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설 준비를 하느라고 한창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유격근거지에서 일제의 ≪토벌≫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고 하면서 교즈와 기장떡과 같은 설음식으로 우리를 푸짐히 대접하였다. 그날밤 오백룡 소대의 김생길이라는 대원은 교즈를 140개나 먹고 배가 아파 죽을 뻔하였다.

그 다음날은 너무 피곤하여 보초를 세우고 하루종일 대원들을 재웠다. 몇 달 동안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혹한 속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늘어지게 자고 나니 눈꼽이 다 나오고 얼굴빛이 환해졌다.

우리는 다음날부터 적들을 답새기기 시작했다. 전술은 자그마한 ≪토벌≫거점들에 대한 습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비교적 큰 ≪토벌≫거점들에 대한 공격을 배합하는 것이었다.

맨 처음으로 친 것이 양수천자의 적이었다. 우리의 벼락같은 기습에 위만군과 자위단이 녹아나고 일본영사관 경찰병영이 완전히 점령되었다. 양수천자에서 적후교란의 첫 총성을 울린 우리는 멀리로 사라지는 척하다가 제자리에 돌아앉아 신남구라는 곳에서 이동하는 적 자동차 수송대를 습격 소탕하고 많은 밀가루와 군수물자를 노획하였다.

우리는 신남구에서 멀리 떨어진 북봉오동의 산악지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쭉 빠져나가 새 전투를 준비하였다. 1934년 2월 16일 밤 북봉오동의 위만군과 경찰, 자위단원들은 모두 우리 부대에 의해 살상 포로되었다.

북봉오동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북고려령



세기와 더불어

을 넘어 사동 방향에 진출한 우리 부대는 동골에 있는 산림경찰대를 공격하여 병영의 적들은 모조리 사살하거나 생포하였다.

적의 동기《토벌》을 분쇄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최후의 싸움은 도문-목단강 사이의 철길을 끼고 있는 주요 군사요충지 대두천에서 벌어졌다. 적《토벌대》로 변장한 우리는 100여 리의 험산준령을 강행군으로 단숨에 돌파한 다음 3개의 조로 나누어 대두천의 경찰서와 자위단실을 습격하고 군수창고에 불을 질렀다.

이 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적들은 유격구를 조이고 있던 포위망을 해제하고 90일 전의 출발지점으로 퇴각하였다. 적들은 《암》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연 석달 동안 유격구의 존립을 위협하던 동기《토벌》의 운명은 서산낙일로 끝나고 말았다.

편이상 마촌작전이라고 불렀던 소왕청 근거지 방위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그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취임과 라이프찌히공판, 소미외교관계 수립으로 소란스럽던 세계의 일각에서 소문없이 생겨난 하나의 기적이었다. 소왕청유격구 방위자들의 영웅적 위훈과 고난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을 방불하게 그려낼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렀다. 수백 명의 생명이 적의 포화에 목숨을 잃었다. 제일 애석한 것은 최금숙과 동장영을 잃은 것이다.

나를 친동생처럼 그렇게도 사랑해주고 돌봐주던 최금숙, 우리가 적구에서 돌아올 때 개선용사들을 향해 눈물을 뿌리며 달려오던 유격구 인민들 속에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전령병이 메고 온 나의 배낭 속에는 그에게 선물할 손거울이 있었다. 다른 부녀회원들에게 줄 전리품도 여러 마대가 되었다.

이 겨울에 우리 부녀회원들이 유격구를 지키기 위해 고생인들 얼마나 많이 하고 눈물인들 얼마나 많이 흘렸던가. 그들이 밥인들 얼마나 많이 짓고 풀뿌린들 얼마나 많이 캐었던가. 길 안내를 강요하는 적들을 유격대가 없는 딴 방향으로 유인하여 골탕먹이고 총살당한 혜숙이와 영숙이! 지휘부가 자리잡은 벼랑턱으로 적들이 기어오를 때 놈들이 쳐들어온다고 연방 외쳐대며 원수들을 자기에게로 유인한 최창범의 숙모!…

어찌 계월향이나 논개만 조선의 열녀이고 애국자이겠는가.

하지만 나의 때늦은 정성은 최금숙의 손에까지 닿지 못하였다. 적들은 내가 일생에서 유일하게 누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단 한 명밖에 없는 여성,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죽지 말고 싸우자고 말하면 오히려 자기는 불로장생하는데 대장이 몸을 돌보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던 여성을 이렇게 앗아갔다.

동장영의 죽음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손실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사상을 존중해주던 중국 동지들 가운데서도 가장 잊지 못할 전우의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중요한 노선 문제를 두고 논쟁도 많이 하였다. 고집이 좀 세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그러한 견해상의 차이가 우리의 우정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는 늘 조선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제일 믿음이 간다고 하면서 무척 나를 위해주었다.

우리는 대두천전투 후 오영구 방향으로 철수했다가 마촌에 돌아와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를 총화하였다. 그 때 마촌에서는 소개지에서 돌아온 인민들이 잿더미 위에 집을 일떠세우고 있었다. 어떤 노인은 유격구에 들어온 후 70번째로 집을 짓는다고 하였다. 살아도 유격구에서 살고 죽어도 유격구에서 죽겠다고 결심한 간도 인민들의 생명력은 이처럼 억척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인민의 지지와 후원이 없었더라면 우리 유격대는 적의 대《토벌》을 격파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촌작전의 승리는 군민일치의 열매이며 인민항쟁의 결실인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곤란을 맞받아나가는 우리의 공격정신과 그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변화무쌍한 전법은 마촌작전의 승리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었다.

마촌작전의 전 과정은 혁명정권의 토양위에서 백절불굴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기개를 안고 거목처럼 우뚝 솟아오른 유격구 정신의 연소과정이었다. 이 정신은 비행기나 대포로써도 정복할 수 없는 견인불발의 힘을 가지고 소왕청의 한치 한치를 피로써 지켜낼 수 있게 하였다.

마촌작전을 통하여 적들은 심대한 군사정치도덕적 참패를 당하였다. 그 대신 우리 혁명군의 군사적 권위는 비할 바 없이 부각되었다. 우리는 이 작전을 통하여 유격전법의 골격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전법들을 무수히 창조하였으며 정차 대부대활동에로 이행할 수 있는 군사조직적, 전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항일유격대는 적의 어떤 침공도 격파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마촌작전은 소왕청을 고수함으로써 인접 현의 유격구들에 가해진 위기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앙양시키는 데도 큰 공헌을 하였다. 1211고지를 사수한 영웅전사들의 방위정신은 바로 1930년대에 탄생한 유격구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정신을 지니고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일로매진하고 있다.

항일전쟁의 포화속에서 탄생하고 연마된 유격구정신을 압도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필승불패의 길을 걸게 될 것이다.

위대한 영도의 거장

최현영 / 구국전선 제462호, 주체90(2001)년 12월 11일



새 세기 첫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우리 민족사에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참으로 잊을 수 없는 해였다.

뜻깊은 한해를 돌이켜 보며 감회깊은 추억과 환희로 부푸는 겨레의 가슴 속에 차넘치는 진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민족의 존엄을 세기의 영마루에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열화같은 흠모이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정치가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은 자주정치로 민족사를 빛내이시는 영도의 거장이시다.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그 누가 선사하는 것도 아니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늘 이북이 정치대국, 자주의 강국으로 존엄높은 것은 **김정일**영수님의 탁월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그분께서는 민족의 자주성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며 모든 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자주정치를 구현하여 오시었다.

김정일영수님의 위대한 자주정치가 있어 저 북녘땅위에 주체시대, 자주시대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이북은 명실공히 자주강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영수님의 자주정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그분의 탁월한 영도에 의해 지난해 6월 반세기이상에 이르는 민족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수뇌분들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하시려는 영수님의 자주정치가 안아온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는 20세기 민족사를 빛나게 장식한 역사적 사변으로서 겨레의 통일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김정일영수님은 선견지명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위대한 선군시대를 펼치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가 자주적인 정치로 되자면 군사선행의 정치로 되어야 한다. 자위가 있어야 자주도 있고 자립도 있다는 것이 지나온 세기와 연대들이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선견지명있는 정치가는 언제나 앞날에 있을 수 있는 사태까지 예견하고 정치를 하는 법이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최악의 역경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놓는 기적을 창조하시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오만무례한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숴 버리고 있는 이북의 위력도, 대외활동에서 제할바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외교전의 연승도 영수님의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정치가는 만민의 칭송을 받기 마련이다.

김정일영수님의 현명한 자주정치, 선군정치는 만민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필승불패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영수님의 높으신 권위에 감복하여 지난해 7월에는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소련이래 국가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북을 방문했고 북미관계개선의 흐름 속에 10월에는 미국무장관이 평양을 다녀갔다.

올해 7월과 8월 전세계를 격동시켰던 **김정일**영수님의 러시아연방방문을 돌이켜 보아도 그분께서 지니신 국제적 권위에 대해 심장으로 절감할 수 있다.

자주적인 이북과의 선린우호친선을 지향하여 유럽나라들의 대북정책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많은 나라들이 북과 국교를 수립하는 현실만 봐도 영수님의 자주정치, 선군정치가 얼마나 위력한가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위도와 경도를 넘어 행성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계정치기상도를 놓고 《조선을 축으로 새로이 일고 있는 세계의 《지각변동》》이라고 하면서 시대를 주도해 나가시는 **김정일**영수님의 걸출한 위인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은 비상한 정치감각과 출중한 정치실력으로 겨레와 만인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시는 세기의 가장 노련하고 권위있는 정치가이시다. 영수님의 자주정치, 선군정치야말로 민족자주위업의 성공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위력하고 이상적인 정치이다.

세상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정치원로이신 **김정일**영수님을 민족의 영도자로, 어버이로 모신 것은 우리 겨레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운이다.

북, 금강산 새해 남북행사 실무접촉 제의

(서울=연합뉴스 2001년 12월 1일) 이충원기자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최근 남한 민간단체에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남북 공동행사를 열기 위해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잇따라 보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에 따르면 북측 민화협은 지난달 22일과 26일 남측 ≪6. 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에 이같은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다는 것.

전국연합 관계자는 ≪이는 통일연대가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갖자고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답신을 보내온 것≫이라며 ≪올해 통일연대와 남측 민화협, 종단 등이 함께참여했던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아니라 시민단체들까지도 포함시켜 새해맞이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금강산 행사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연대 관계자는 ≪북측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통해 통일연대로 팩스를 보내왔다≫고 확인했다.

종단의 한 관계자는 ≪일단 시민단체까지 포함시켜 준비위원회를 만든 뒤 300여명 규모로 대표단을 보내자는 데 대해 통일연대, 남측 민화협, 종단 실무자간에 공감을 이룬 상태≫라며 ≪하지만 정부 반응 등을 살펴본 뒤 내부 조율을 좀 더 거친 다음 종단의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측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도 ≪당국간 남북 접촉이 끊긴 상태에서 민간 단체가 접촉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8. 15 평양 공동행사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참여 여부를 고민중≫이라며 ≪내주중 상임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단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또다시 통일연대와 함께 북한에 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통일연대가 가든 말든 우리로선 가지 않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 15 공동 행사 파문이 일어난 뒤인 지난 9월 종전처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람 뿐 아니라 민. 형사 문제로 수배중이거나 이적단체 구성원도 모두 방북을 불허하기로 내부 기준을 정한 바 있어 이번 행사 허용 여부가 주목된다.

새해맞이 금강산 남북 민간공동행사 조건부 허가 예상

정부는 북측 민화협과 남측 통일연대 등이 공동주최할 금강산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또한번 파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금강산 행사를 주최할 남측 민간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 민ㆍ형사 문제로 수배 중이거나 이적단체 구성원을 제외하고 방북단을 구성할 경우 행사 참가를 허가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아직 행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방북신청도 없는 상태라 허가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사들을 배제할 경우 방북을 불허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번 행사 주최인 통일연대 등은 8ㆍ15 평양남북공동행사때 3대헌장 기념탑 참석과 만경대 사건 등으로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 교체와 민주당ㆍ자민련 공동정부 붕괴까지 초래한 바 있어 향후 여론 반응이 주목된다.

남측 민화협과 통일연대 등은 이번주 중 자체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행사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정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대표단은 8ㆍ15남북공동행사에 참가했던 통일연대와 남측 민화협 그리고 종단대표단 및 시민단체들까지 포함해 300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민화협은 통일연대가 금강산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수락의사를 밝히고 이를 위해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왔다.

한편 정부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10일로 예정된 현대아산과 북측의 접촉결과에서 북측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해 올 경우 곧바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 실시를 논의하기 위한 2차 당국간 회담을 이르면 이달 중순내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2001년 12월 3일

금강산 새해맞이 방북허가 요청



민족화해협력위원회와 통일연대, 종단대표 등으로 구성된 금강산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는 4일 정부에 방북허가를 요청했다.

남측 준비위는 시민단체 대표까지 포함해 300명 규모로 방북단을 구성해 오는 30일 설봉호편으로 금강산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아직 북측과 실무협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방북기간 중 해금강에서 통일기원문 낭독과 해맞이 행사 등을 가질 계획이라며 정치적 행사는 일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 관계자는 민간레벨에서 대화의 끈을 이어가자는 뜻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의 접촉결과 야당 반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지금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협상 노력이라며 이런 마당에 정부가 금강산 송년대축제 참가를 허용한다면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영석기자 yskim@kmib.co.kr
2001년 12월 5일

7대종단 새해 남북행사 결론 못내려

(서울=연합뉴스 2001년 12월 11일) 이충원기자 = 7대 종단 대표들이 11일 낮 서울 시내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북측이 제안한 ≪새해맞이 남북 공동 행사≫ 참가 여부를 두고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대 종단 모임인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행사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두고 이런저런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정부 입장 등에 대해 더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강원용 목사(개신교), 김종수 신부(천주교), 최창규 성균관장(유교), 김 철 교령(천도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화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단이 참가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종단의 논의를 더 지켜본 뒤 향후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달 22일 남측의 통일연대에 팩스를 보내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남북 공동행사≫를 열자고 제의했으며 통일연대, 종단, 민화협 등은 ≪새해맞이 남북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 지난 10일 북측에 ≪17-18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할 계획이었지만 종단 등이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해 보류된 상태다.

2002년 정세와 남북 민간교류의 의의

새해맞이 행사와 관련하여

2002년 새해맞이 행사를 남북의 공동의 행사로 치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통일연대, 민화협, 7대 종단 등 지난 8.15 민족통일대축전을 함께 치렀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이 어떤 결실을 맺을 지는 현재로써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 행사가 갖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 본 글에서는 새해맞이 행사의 의의와 관련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새해맞이를 남북이 공동으로 치르는 의의는 무엇보다 조성된 정세와 관련이 있다.

9.11 참사 이후 미국은 전 세계를 테러와 반테러로 이분할 것을 강요하며 국제질서의 인위적 재편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 고위 관리들의 연이은 대북 강경 발언은 예사롭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북미간의 첨예한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11.4~11.9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6차 장관급 회담은 공동보도문 초안까지 합의한 상태에서 막판 결렬되고 말았다. 6차 장관급 회담의 결렬은 9.11 참사 이후 미국의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과 연동된 남측 사회의 친미보수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다. 조미 각축은 예측하기 어려운 격돌을 내연한 채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남북 당국자 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북의 민간급 차원의 대화와 공동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완화하고 6.15 공동선언에 대한 새로운 활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현 정세를 돌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해맞이 행사가 갖는 두 번째 의의는 다음과 같다.

대체로 2000년 10월 조선노동당 55돌 행사에 남측에서 42명의 대표단이 참관한 이래 2001년 상반기에는 남북간에 활발한 민간 교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민간급 교류는 6.15, 8.15에 각계각층이 한 자리에 모여 민족의 통일의지를 과시하는 단합과 화해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운동의 성과는 반통일수구세력의 조직적인 정치 공세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북단 7명이 구속되고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해임되는 등 전반적인 보수화, 반동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세의 연장선하에서 이회창 대세론이 기승을 부리고 야당은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개악을 통해 민간급 교류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번 새해맞이 행사는 8.15 축전의 의의를 다시금 상기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간급 교류와 협력, 접촉과 대화에서 2002년은 다시 한 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북은 8.15 축전을 평가한 기초 위에서 4월에서 6월에 이르는 시기 ≪10만명 대집단체조와 아리랑 축제≫를 준비하고 남측의 참여를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간 ≪민족 21≫ 참조) 북측이 행사의 명칭을 아리랑으로 정한 것은 이념적 색채를 탈각시키고 민족적 동질성, 대단결을 기초로 보다 확대된 민간급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구상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차 장관급 회담이 비록 결렬되기는 했지만 7차 장관급 회담의 서울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이 한 때 합의된 바 있었다. 또한 내년은 북측으로 보면 2.16 **김정일** 비서 60회 생일, 4.15 **김일성** 주석 90회 생일이 남측으로 보면 5.31 월드컵 등이 중요한 일정으로 되어 있다.

이상에 정세 인식에 기초해 본다면 아마도 내년 상반기 민간급 교류의 향방이 정세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민간급 교류의 활성화는 곧바로 남북 당국자 회담의 성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남북 당국자간 회담이 재개될 것이다.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는 남북간의 당국자간 회담이 진행되더라도 전격적인 합의보다는 완만한 상승 곡선 또는 평행선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년 봄의 민간급 교류의 대규모적인 성사는 남북 당국자간 회담의 발걸음에 속도를 붙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당국자간의 극적인 진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둘째는 역시 조미 관계와의 문제이다. 점차 경화되고 있는 조미 격돌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의 대단결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남과 북이 대규모로 상호 방문, 교류하고 남북이 전향적인 민족적 합의를 연이어 이루어낸다면 미국의 대북 공세의 여지는 그 만큼 작아지는 것이다.

새해맞이 행사가 갖는 의의는 생각보다 크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민경우 기자

2001년 12월 12일 ©2001 Unews

의문사 최종길 교수 ≪간첩 자백 없었다≫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 ≪의문사 1호≫로 손꼽히는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사인과 관련, 지난 73년 중앙정보부 발표와 달리 최교수가 ≪유럽거점 간첩단≫ 일원임을 자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가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20일 ≪중정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와 당시 수사기록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 중정이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시인한후 자책감에 중정건물 7층 화장실에서 떨어져 자살했다≫고 거짓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또 ≪최근 국내 외상학회뿐아니라 재야 법의학자들까지도 최 교수 사망사진과 당시 검시기록등을 검토한 결과, ≪최 교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중정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이 틀림없다≫고 전해왔다≫며 ≪최교수가 중정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당한 사실도 새로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최교수 의문사 사건의 실체는 지난 73년 유신체제에 항거해 서울대생들의 첫 데모가 일어나자 박정희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최교수를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에 엮어 조사하던 과정에서 최교수가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교수 사망사건에 대한 당시 중정 감찰기록에 수사관이 최교수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들어 있었다≫며 ≪하지만 최교수가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으나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교수의 직접 사인이 추락사임에 비춰 최교수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거나, 가사상태에 있는 그를 수사관들이 밀어떨어뜨린 것등 둘중의 하나 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최교수가 고문을 수반한 중정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50년대 후반 독일 유학시절 공산정권하인 동베를린을 다녀온 점을 털어놓게 되고, 유력한 간첩용의자로 떠오른 친구 이모씨(현재 북한거주)와 평범한 안부 서신을 주고받은 것 등이 간첩혐의로 추가되자 정신적, 신체적 압박감과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 투신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조만간 최교수 사건과 관련, 당시 중정 실무 책임자와 일선 수사관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인후 내부 논의를 거쳐 최교수의 죽음이 민주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죽음인지를 결정한후 이를 공식발표할 방침이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
2001/08/20 ⓒ 2001 OhmyNews

≪최종길교수 중정수사관이 떠밀어 사망≫

중정 조직적 은폐의혹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가 조사 도중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중정 발표와는 달리 수사관에 의해 떠밀려 숨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특히 최교수의 죽음과 관련, 당시 중정에서 작성한 현장검증조서 등 관련서류 5건 모두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교수가 고문을 피할 목적으로 투신자살했거나 모욕적 수사방식에 항거해 투신자살 했을 가능성보다는 수사관들의 사실상 ≪타살≫에 의해 사망했으며 중정측은 이를 알고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에 따르면 지난달 진상규명위에서 조사를 받은 당시 중정의 수사 책임자였던 모 간부는 ≪수사관(들)이 건물 외벽의 비상계단에서 최교수를 밀었다는 얘기를 부하직원 모씨에게 했으며 이 부하직원이 사건 당일 이 사실을 나에게 얘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간부는 진술에서 ≪당시 부하직원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최교수 사망사고 직후 자신을 7층 화장실옆 비상계단으로 끌고가더니 양손으로 미는 시늉을 하면서 ≪여기서 밀어버렸어≫라는 내용을 들었다고 말하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김형태 진상규명위 제1상임위원은 또 ≪최교수의 조사 및 죽음과 관련, 중정에서 작성한 문서 5건 모두가 허위로 작성됐음이 드러났다≫면서 ≪현장검증조서의 경우 현장검증에 참여했다고 기록된 인사들 중 실제로 현장검증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역시 허위≫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중정의 발표는 모두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당시 중정이 최 교수 죽음의 진상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 당시 수사책임자들은 물론 중정 고위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 간부에게 최교수를 밀었다는 수사관(들)의 말을 전한 부하직원은 이미 사망해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망자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며 ≪이 간부가 한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관련, 이미 지난 4일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김치열 당시차장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으나 이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조사에 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최교수 사망과 관련, 남아공, 영국, 일본 등 3개국 법의학자에게 사인규명을 의뢰, 이중 2개국 법의학자들로부터 답신을 받아 분석작업중이며 이달말께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2001/12/10 ⓒ 2001 OhmyNews

≪형의 죽음은 고문 때문입니다≫

≪인터뷰≫ 의문사 1호 최종길 교수 친동생 최종선 씨



≪늦었지만 형님의 명예회복과 함께 인고의 세월을 보내온 형수, 조카 그리고 형님 문제로 고통받은 동료 교수들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건 없습니다. 28년전 제가 양심 수기에서부터 제기해 온 의혹을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다 사망한 최종길(당시 42세) 서울대 법대교수가 타살됐다는 당시 중정 간부의 증언이 처음으로 나온 10일 최 교수의 동생 최종선(54) 씨는 착잡한 심정으로 소감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 D.C. 교외지역인 애난데일에 사는 최 씨는 ≪진실은 손에 쥐어졌었는데 그걸 확인하는데 28년이나 걸렸다≫면서 ≪그것은 조국이 인권, 민주국가가 아닌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최종길 교수는 73년 10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중앙정보부(부장 이후락)의 조사를 받다 추락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중정과 검찰은 최 교수의 사인을 간첩행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했다.

둘째 형인 최종길 교수의 사망 당시 중정 감찰실에 근무중이던 최종선 씨는 독자적으로 진상을 추적, 이후 정신병원에 위장 입원하면서 수기를 기록하는 등 지난 세월 동안 목숨을 걸고 형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앞장서왔다. 올 봄에는 수기 ≪산 자여 말하라≫를 한국에서 출간, 형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진실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씨는 당시 중정 간부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에서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중정 건물 7층 바깥 비상계단에서 밀어버렸다는 보고를 부하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한 진술에 대해 ≪일개 수사관들이 건강한 사람을 건물 밖으로 밀어냈겠느냐≫며 ≪거기에는 떠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고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타살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수사관들이 형을 고문한 끝에 회생 가망이 없자 추락사나 투신자살을 위장한 것 아니면 고문으로 사망한 직후 밀어낸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최 교수 의문사 사건은 중정이 유신 선포에 따른 대규모 시위 사태, 김대중 납치사건에 따른 민심 이반 등을 만회하려는 차원에서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다 저지른 ≪실수≫다.

정작 그가 분개하는 것도 ≪고문에 의한 과실치사는 실수라 할 수 있더라도 그 이후 중정과 검찰이 형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고, 서류를 조작하고 또 간첩으로 몰아간 행위≫이다.

이를 ≪계획적 고의범≫이라고 표현하는 최 씨는 ≪형의 죽음이 중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은폐 주역은 검사들≫이라면서 검사 출신인 김치열 중정차장, 안경상 대공수사국장과 사건 조사를 맡은 이모 검사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검찰의 정치적 처신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

형의 죽음과 사건 조작에 관련된 자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 그는 ≪공소시효는 비록 만료됐지만 반 인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게 국제적 관례≫라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는 개인의 원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독재를 제도화한 장치인 고문이 사라지고 인권,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응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활동에 대해 최 씨는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완전한 진실 규명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94년 도미한 최종선 씨는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골프장 티칭 프로와 함께 아메리카 트러스트 모게지 회사에서 융자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형의 명예가 회복된 후 귀국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그는 ≪살인자의 주구들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나라에 무슨 도덕과 정의가 있느냐≫며 ≪박정희 기념관이 지상에 세워진다면 불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종국 기자 jk21dc@naver.com

≪베일 벗는 수지 김 사건≫ ≪5공판 반공드라마≫

1987년 1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여간첩 수지 김의 남편 강제 납북 미수사건≫의 진상이 15년 만의 검찰 수사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진상은 남편 윤태식(尹泰植)씨가 벌인 단순 살인사건을 안기부가 국내 정치상황에 이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당시 안기부는 이를 위해 외무부측과의 마찰도 무릅썼고, 지난해에는 경찰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 87년 윤씨 기자회견=안기부는 87년 1월 8일 ≪S통상 홍콩 본부장 윤씨가 싱가포르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강제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며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당시 28세였던 윤씨는 기자회견장에서 감격적인 목소리로 눈물까지 흘려가며 납치 및 탈출경위를 설명했다.

≪86년 9월 2일 상사 주재원으로 홍콩에 들어간 직후 수지 김(본명 金玉分, 당시 34세)을 만나 10월 16일 결혼했다. 이 때까지 아내가 조총련 조직과 연결된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던 중 87년 1월 2일 밤 조총련계 공작원 두 명이 아파트로 찾아와 ≪사업 이야기를 한다≫며 아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담배를 사러 나갔다 들어오니 세 사람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전날 집으로 왔던 남자 한명이 다음날 찾아와 아내를 찾고 싶으면 싱가포르로 오라고 했다. 4일 오전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더니 한 여인이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주며 그곳으로 가라고 했다. 도착해보니 그곳은 북한 대사관이었다. 북한 대사와 아내는 나에게 평양행을 강요했다. 그들은 우선 스위스로 가서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했다. 내용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문익환(文益煥)목사와 신민당 유성환(兪成煥)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었는데 검찰이 두 사람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해 정치망명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협박을 받고 호텔로 돌아온 뒤 감시소홀을 틈타 한국대사관으로 탈출했다.≫

윤씨는 다음 날 안기부 요원들과 함께 귀국해 김포공항에서 똑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 수지 김 시체 발견=윤씨가 귀국한 지 17일째이던 1월 26일 수지 金이 홍콩의 아파트 안방 침대 밑에서 목이 졸린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홍콩 경찰은 수지 김 여권을 검사한 결과 홍콩을 떠난 적이 없으며 타살이 명백하다고 결론짓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뒤 홍콩경찰은 윤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우리정부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 안기부의 은폐 및 배경=검찰의 최근 수사에서 안기부는 수지 김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부터 윤씨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87년 귀국 직후 안기부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자술서까지 작성해 제출했다.

또 최근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당시 기록과 당시 외무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씨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탈출경로도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윤씨는 북한대사관을 탈출해 곧바로 한국대사관을 찾은 게 아니라 미국대사관측에도 망명을 요구하다 통보를 받은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에 의해 신병이 넘겨졌다.

당시 대사관측은 또 모종의 경로를 통해 윤씨가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자진월북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한 사실도 파악한 상태여서 당시 장세동(張世東)안기부장 명의로 온 윤씨 기자회견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안기부는 윤씨 기자회견을 싱가포르에서 하지 못하고 방콕에서 하게 됐다.

윤씨가 북측으로부터 강요받았다는 기자회견문에 등장한 유의원은 86년 10월 ≪국시(國是)발언 파문≫으로, 문목사는 86년 5.3 인천사태 배후인물로 각각 구속된 상태였다.

따라서 안기부는 당시 5공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북한 공작원에 의한 납북미수 사건≫으로 몰고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무부측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이 사건을 왜곡 조작했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 당시 안기부 고위층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2001년 12월 6일

≪수지 김 사건≫ 14년만에 베일벗는 진실



국가 기관에 의해 장기간 은폐 왜곡됐던 수지 김(본명 김옥분·金玉分)씨 살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공모해 진실규명의 기회를 또 다시 원천봉쇄한 진상까지 밝혀지고 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대로라면 김씨를 살해하고 간첩누명까지 씌운 살인범은 벤처기업가로서 화려한 세월을 보냈다. 반면 김씨의 가족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쓴 채 인고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14년만에 드러난 진실을 밝힌다.

◆왜 조작-은폐 했나

전두환(全斗煥) 정권 말기였던 87년 1월8일 태국 방콕에서는 놀랄만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S통상 홍콩 주재원으로 알려진 윤태식(尹泰植·당시 28세)씨가 북한이 조총련계 공작원이자 홍콩 교포인 아내(수지 김)를 통해 나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이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윤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당시 상황에서 그의 말의 진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국가안전기획부도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윤씨는 다음날 곧바로 귀국해 서울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씨는 납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반공이야말로 나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느꼈다는 말까지 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지난달 말, 검찰은 지난해 3월 내사 착수 이후 20개월에 걸친 비공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씨가 부인 수지 김을 살해한 뒤 사건을 위장하기 위해 납북 자작극을 벌였다며 윤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당시 안기부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은폐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 외사부에 따르면 안기부는 윤씨를 서울로 데리고 온 87년 1월9일 오전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기부는 진실을 밝힐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내부의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냥 납치극으로 가자고 결론지은 것이다.

결국 9일 오후 열린 윤씨의 서울에서의 인터뷰는 안기부 연출-윤태식 주연의 총체적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수사 결론이다.

수지 김은 윤씨가 귀국한 뒤 17일째 되던 87년 1월26일 홍콩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안기부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홍콩 경찰의 윤씨에 대한 수사 요청도 거부했다.

검찰은 당시 안기부의 진실 은폐 보고선상에 있던 이학봉(李鶴捧) 당시2차장을 9일 소환조사했고 장세동(張世東) 당시 안기부장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 15년 동안 감춰져 온 진실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작년 재수사 중단 경위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3년간 은폐 왜곡됐던 수지 김 살해사건의 진상을 떳떳이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묵살하고 사건을 다시 덮었다.

그 기회는 언론이 제공했다. 주간동아가 지난해 1월20일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월말 홍콩 경찰에서 수사기록 일부를 넘겨받은 직후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당시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일 수도 있다는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경찰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경찰청 외사3



과는 2월 12~13일 이틀 연속 수지 김의 남편 윤태식(尹泰植·43)씨를 불러 조사했다.

윤씨는 이미 87년 안기부에서 조사를 다 받았고 죄가 없어 풀려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월14일 국정원에 87년 당시의 사건기록을 넘겨줄것을 요청했다.

김승일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을 찾아온 것은 바로 다음날. 김 전 국장은 엄익준(嚴翼駿·작고) 당시 2차장에게 보고한 뒤 이 전 청장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이 전 청장에게 사건이 실제는 단순 살인사건이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전 청장은 그날 김모 경찰청외사관리관에게 사건 협조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국정원은 2월17일 경찰에서 사건 기록을 가져간 뒤 며칠이 지나 기록을 돌려줬고 그 직후 경찰 수사는 종결됐다.

이 전 청장은 그러나 지난해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라는 지시만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전 국장은 올해 11월15일 모 호텔 커피숍에서 이 전 청장을 만나 내가 곤란해졌으니 엄 전 차장과 협의한 걸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주장보다 사건의 실체를 이 전 청장에게 알려줬다는 김 전 국장과, 협조 지시를 받았다는 김 전 외사관리관 등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피해자가 십수년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공모해 경찰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외사관리관이나 국정원의 실무자들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고 판단,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 어떻게 다시 불거졌나

14년만에 진상이 밝혀진 수지 김 살해 은폐조작 사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은 언론의 끈질긴 추적 보도였다.

이 사건은 87년 사건 발생 후 점차 잊혀져갔다. 그러다 다시 수사당국과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20일자 주간동아에 87년납북미수사건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주간동아 이정훈(李政勳) 기자는 95년 7월부터 주홍콩 한국대사관에 근무한 외무부 직원 등을 찾아다니며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다. 주간동아측은 그때까지의 취재 결과를 토대로 김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전두환(全斗煥) 정권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가 이 사건을 공안정국 조성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 이후 서울방송(SBS)은 주간동아의 취재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2월12일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홍콩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과 윤태식(尹泰植)씨의 사기 행각 등을 보도했다. 서울지검 외사부가 지난해 3월 주간동아와 SBS의 보도 내용을 참고해 내사에 들어갔으며 윤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도 보도 내용을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수지 김 사건 첫 보도가 나가던 87년 당시 언론에도 어두운 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87년 1월 국내 언론은 수지 김의 남편 윤씨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북될 뻔했다가 탈출했다는 안기부의 기자회견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언론들은 안기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납북 공작 실태와 윤씨의 북한대사관 탈출기 등을 자세히 보도해 공안정국 조성에도 기여했다. 국내 언론은 87년 1월26일 수지 김의 시체가 발견된 이후 홍콩 언론들이 타살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홍콩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도했을 때에도 침묵했다.

김종훈(金宗勳) 변호사는 10일 언론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진실은 영원히 은폐될 수 없다는 점과 언론의 침묵은 곧 사건 관련자의 고통이라는 점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2001년 12월 10일

수지 김이 되살려낸 KAL기 사건 ≪불씨≫

≪정권 안보 이용≫ 의혹 눈초리…
희생자 가족, 진상규명위 만들고 재조사 촉구

지난 11월29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원지는 공원 한편에 자리 잡은 ≪KAL 858 희생자 위령탑.≫ 이날 공원에서는 1987년 미얀마 안다만 상공에서 사라진 대한항공 858기의 승객과 승무원 1백15명을 기리는 14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희생자 가족 70여명이 차례로 헌화했고, 북받치는 설움을 참지 못한 일부 가족은 위령탑 뒷면으로 향했다. 그들은 위령탑 뒤쪽에 새겨진 자식과 남편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오열했다.

그러나 차옥정씨(64)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대한항공 조종사였던 남편 박명규씨를 잃은 차씨는 오전 10시쯤 남들보다 먼저 행사장에 도착해 차분히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추모제에 앞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통일연대·민주노동당·민주노총 등 재야 시민단체와 희생자 가족 10여명은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1987년 11월29일 오후 2시, 바그다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기가 사라졌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항공기 실종 이틀 만에 중간 기착지 아부다비에서 내린 승객 11명 가운데 남녀 2명을 수상히 여기고 추적했다. 한·일 공조 수사로 이들의 여권이 위조된 것을 확인하고 바레인 공항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붙잡았다. 붙잡힌 하치야 신이치(김승일)는 조사도 받기 전에 음독 자살했고, 하치야 마유미(김현희)는 음독을 기도했으나 죽지 않았다. 극적이게도 13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하루 전날(12월15일) 마유미는 자해방지용 재갈이 물린 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노태우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뒤 1988년 1월15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북괴 노동당 조사부 소속 여자 특수 공작원 김현희가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기부는 증거로 그녀의 자필 진술서와 1972년 11월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에 앞서 우리측 장기영 대표에게 꽃다발을 주는 어린 김현희 사진을 제시했다.

희생자 가족 대부분은 정부 발표에 수긍하지 않았다. 희생자 가족들은 김현희의 진술 외에는 폭파와 관련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1백15명의 유품이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자, 청와대·민정당·평민당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진정했다. 그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해 들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유족≫이라는 말을 쏙 빼버렸다. 사고 원인도 불분명한데 유족·유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항변이었다. 가족들은 ≪대한항공 858 가족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 규명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줄

기차게 해왔던 셈이다. 당시 안기부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가족회를 감시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가족들은 주장했다. 초대 회장을 맡았던 권기호씨(75)에 따르면, 가족들이 모임만 가지면 귀신같이 안기부 직원이 찾아와 ≪조용히 있는 것이 낫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권씨는 ≪가족들은 목숨을 내놓고 활동했다. 정부가 구린 데가 없으면 왜 그랬겠느냐≫라고 분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대신 가족회 내부에서 현실론이 대두했다. 희생자 대부분이 남편・아들이어서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았다. 가장이 사라진 가정에 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다. 가족들 사이에서 진상 규명보다는 보상을 우선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가족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창씨(66) 역시 보상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의 공식 발표마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일단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아야 한다≫라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처럼 사그라지던 진상 규명의 불씨는 아이러니컬하게 안기부가 되살렸다. KAL 858기 사건과 같은 해에 일어난 ≪수지 김≫ 살인 사건이 안기부에 의해 공안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안기부가 정권 안보를 위해서 수지 김 사건을 제멋대로 은폐하고 왜곡한 것을 보면서 ≪KAL기 사건도 혹시나≫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게 된 것이다. 가족들의 의혹에 현준희 전 감사원 감사관이 논리를 제공했다. 1996년 효산 콘도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중단 의혹을 폭로해 해직당한 현준희씨는 14년 동안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사건을 추적해 왔다(42쪽 상자 기사 참조). 진상 규명 요구에 인권단체도 함께 했다. 지난 11월23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도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는 ≪내가 김현희씨 변론을 맡았다면 무죄를 주장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자백 외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또한 아부다비 공항에서 김현희씨 일행과 함께 내린 탑승객 11명을 왜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사고 원인을 밝힐 블랙박스 수색작업을 10일 만에 왜 중단했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현희, 희생자 가족회에 인세 8억5천만원 전달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앞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11월29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추모제에 초대된 자유민족회의 이철승 대표는 ≪진상 규명 요구는 **김정일**이 사주한 것이다. 이미 **김정일**의 테러라고 밝혀진 마당에 무슨 진상 규명이냐≫라며 이념 논쟁으로 몰아갔다. 안기부 후신인 국가정보원 관계자도 김형창 회장을 만나 ≪제기한 의혹은 유언비어 수준이다. 당시 정부 발표가 맞다≫라고 해명했다. 김현희씨에게서 증언을 새로 듣기도 쉽지 않다.

김씨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1997년 12월 전 안기부 직원 정 아무개씨(42)와 결혼한 뒤 그녀는 지난해 10월 아들을 출산했다. 출산한 뒤 혼인신고를 하면서 그녀는 이름을 바꾸어버렸다. 그녀는 ≪대박≫을 터뜨린 수기집 인세 8억5천만원을 결혼하기 직전 가족회에 전달했다. 그녀로서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던 셈이다. 가족회 김은제 총무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려다 여의치 않아 올해 초 가족들에게 8백50만원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가족회가 공식으로 그녀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옹색하게 되어 버렸다.

고제규 기자 unjusa@e-sisa.co.kr
시사저널 제633호, 2001년 12월 13일



한나라 ≪KAL기-아웅산 사과해야≫

남북 장관급 회담 앞둔 여야 표정



미국 테러참사로 세계가 충격 속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공동 반테러 선언≫ 채택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있어, 이번 선언이 미 테러 참사로 인한 북미, 남북 관계의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연일 ≪북은 KAL기 폭파사건과 아웅산 테러 사과해야≫한다면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남북 장관급 회담은 오는 15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지난 2월 당국간 회담 이후 6개월만의 일이다. 더욱이 미국 테러참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었던 북한과의 회담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북한은 테러참사 발생 하루 뒤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테러를 반대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도 ≪장관급 회담에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테러참사가 회담에 미칠 악역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3일 새 비서진과의 첫 수석회의 자리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테러에 반대한다는 선언을 한다면 의미 있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공동 반테러선언을 채택한다면 북미 관계에 있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물론 남북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문제, 교류협력사업,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금강산 육로관광 등 현안 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처리하지 못한 현안문제와 함께 회담의 정례화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측대표단은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하루 남겨둔 14일 회담 대책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를 방문한 뒤 홍순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대표단 간담회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데 이어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최종 모의회의를 갖고 회담대책을 마무리지었다.

15일 오후 2시경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항공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될 북측 대표단은 공항에서 간단한 환영행사를 갖고 숙소인 종로구 평창동 올림피아 호텔로 이동해 일정 협의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간다.

통일부는 14일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대표단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남측 : 홍순영 통일부장관(수석대표, 단장),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 이봉조 통일부 실장, 서영교 통일부 국장

△북측 : 김령성 내각책임참사(수석대표, 단장), 조성발 내각사무국 참사,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허수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사장 겸 무역성 광명성지도국 차장, 김만길 문화성 국장.

한나라당, ≪북은 KAL기 폭파사건과 아웅산 테러 사과해야≫

한나라당은 14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어제에 이어 대북정책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김기배 사무총장은 이번 회담에서 추진하게 될 남북공동 반테러선언과 관련, ≪형식적인 반테러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테러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과거 KAL기와 아웅산 테러로 가족을 잃은 많은 국민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진행해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며 ≪이 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퍼주기만 하고 성과도 없고, 회담을 해도 공개하지도 않고 몇몇 사람만 알고 있으면서 베일에 가려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희 제1정조위원장도 ≪북에 KAL기와 아웅산 테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금년 들어 ≪자주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남남갈등과 미국과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햇볕정책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정부가 국가를 위해서 싸운 국가유공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는 천대하면서 반테러선언으로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체시키려고만 하는 것은 진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임동원을 외교안보통일특보로 앉혀둔 것을 보면 정말 영수회담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남북장관급 회담도 임동원이 주도하게 된다면 옛날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반테러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남북장관급 회담과 관련 성명을 내고 ≪남북 ≪반테러선언≫을 채택하자는 김대중대통령의 제안은 남북의 평화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민족의 화해 협력,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민련, ≪남북장관급 회담은 임 전 장관을 위한 것≫

반면 자민련 변웅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가 북한의 일방적인 의지대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우려와 분노를 하고 있다≫며 남북장관급 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변 대변인은 ≪6개월 전에 전략적으로 모든 남북대화를 단절시킨 북한이 국회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불과 몇 시간 전에 의도적으로 남북장관급 회담을 제의했다≫며 ≪북한의 이러한 제의가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보다는 임 전 장관을 생각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비열한 발로≫라고 비판했다.

변 대변인은 또 ≪우리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장정인 햇볕정책의 기조에는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남북관계가 북한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최경준 기자 235jun@ohmynews.com

북 테러지원국 해제 관건은 KAL기사건



(서울=연합뉴스 2001년 12월 3일) 강진욱 기자 =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미 관계 개선, 북.일 수교,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해 지난 87년 발생한 ≪김현희의 KAL기 폭파사건≫이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측에서는 최근 몇몇 언론이 이 사건의 의혹을 보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등 통일운동진영 및 사건 관련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달초 북.일 양국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수교문제와 관련해 접촉한 것과 때맞춰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 진보적인 학자들이 ≪근거가 빈약한 의혹사건이 양국 관계 진전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또 우파 단체들을 중심으로 김현희의 개인교사였던 호스티스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실종과 관련한 ≪일본인 납치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고 있다.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사건 발생 두달 만인 지난 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림으로써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을 봉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북.미 관계 개선의 관건이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8월12일 남측 언론사 사장단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이 ≪꼭지≫만 떼주면 곧바로 수교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근에도 북한은 미국의 대북 대화 재개 의사 표시와 관련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또 북.일 수교 협상이 이뤄질 때면 항상 등장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의혹사건≫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양국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이기도 하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의혹≫은 김현희의 KAL기 사건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일본 여론을 타게 된 것은 바로 김현희의 KAL기 사건을 통해서였다.

일본 공안당국은 북-미 대화가 순풍을 타고 남북이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본격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북.일이 무려 8차례에 걸쳐 수교 협상을 진행중이던 지난 91년 5월 김현희의 일본화교육을 담당한 ≪이은혜≫(李恩惠)가 바로 78년 6월 일본에서 실종된 다구치 야에코라고 발표했다.

와다 도쿄대 명예교수는 최근 월간지 ≪세카이(世界)≫ 등에 발표한 글에서 ≪북한이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7건이나 모두 근거가 빈약하다≫며 ≪일본인들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KAL기 사건은 또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장애물이기도 하다. 올해 초 일부 유족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이 사건의 주범이라며 검찰에 고소하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월간≪내외저널≫ 10월호(창간호)에 ≪김현희 KAL기 사건 조작 의혹≫이라는 글을 게재한 전 감사원 직원 현준희씨와 사건에 의혹을 품은 사람들이 사건 관련 비디오를 시청하는 등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AL기 대책위, 100만인 서명운동 발족키로



7일 낮 12시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 1차 회의가 열려 사업계획안, 운영내규안, 조직체계 및 인선안을 검토,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피해자 가족을 비롯해 통일연대, 한국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불교인권위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사건의 의혹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12일 오후 2시 인사동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최규엽(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이경(통일연대) 사무처장은 사업계획안 발표를 통해 홍보사업으로 △사건 비디오 관람사업 △강연회 사업 △기자간담회 등 여론사업 △자료집 제작 등 선전사업 △홈페이지 제작 등 인터넷 사업 등을 제시했으며, 실천사업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국정원 공개 간담회 △대국민토론회 △국정원 앞 항의시위 등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어서 운영내규안 검토를 통해 대책위의 명칭을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약칭 ≪KAL기 대책위≫)로 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운동 전개 △남북공동조사단 구성사업 △각종 조사 연구사업 △졸속수사, 직무유기 책임자 처벌사업 △실종자 가족들의 실질적 피해보상사업 △분단잔재 청산 및 한반도 평화, 통일실현 사업 △국제연대사업을 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직체계 및 인선안 검토에서는 각 단체 대표들이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했으며 상임공동대표의 인선은 차후로 미뤘다.

≪KAL기 대책위≫ 집행위원장에는 최규엽 위원장이 통일연대 KAL대책위원장 자격으로 맡기로 했으며 대변인에는 이 사건을 14년간 추적해 온 전감사원 직원 현준희씨가, 사무처장에는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이 선임되었다.

대책위는 12일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잘 준비할 것을 결의하고 각 단체와 개인별로 분담금을 거둬 재정을 충당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곽태영(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종찬 전안기부장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친분이 있는 이종찬씨에게 직접 이 사건의 의혹을 속시원히 밝힐 것을 요청해 보았지만 ≪곽 선생, 못합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희생자 김덕봉(당시 45세, 현대건설 전무)씨의 부인 임옥순(50)씨는 ≪힘없는 노무자 가족들에게 지금 가족회 대표들이 보상금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KAL기 대책위≫는 지난 29일 MBC 9시뉴스에 방영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이 사건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못한 사정에 대해 MBC측 설명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KAL기 대책위≫가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기본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섬으로써 14년간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 사건이 다시한번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07

국가정보원의 더러운 흉계가 연일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들어 국가정보원의 추악하기 그지없는 과거의 죄행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로 그리고 국가정보원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하는 것은 다르지 않고, 그 기세 또한 여전하다. 이회창이 반통일 세력의 수괴라면, 그 든든한 방패로 되는 것인 국가보안법이고, 그 행동대장격으로 되는 곳이 다른 아닌 국가정보원이다.

최근 일련의 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한 ≪수지 김≫사건은 당시의 민주화에 대한 흐름을 눈 가리우고,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기 위한 하나의 사기극이다. 난데 없이 북의 공작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살해하였다. 역 살해하고 남으로 귀국한 한 애국시민의 일로 둔갑되었다. 애초에 평범한 여인을 난데없는 북공작원으로 살인마로 매도한 것이다. 이사건의 조작은 어정쩡한 수사 이후 북에 대한 집중 공세로 마무리되었다.

또 전체 국민을 상대로 수백의 죽음을 담보로 한 사기극 KAL기 사건은 또 다른 예이다. 의혹 투성이로 마무리되어진 KAL기 사건은 이북의 국가수반을 시대의 살인마로 매도하고, 군사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날조 사건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은폐 왜곡되었던 사건들이 최근 들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최근의 이러한 흐름과, 일련의 왜곡 날조된 사건들에 대하여 응분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라, 현실의 국가정보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름이 바뀌고 껍데기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가정주부를 살인마로 매도하고, 수백을 살해하고 버젓이 이북의 테러로 규정 둔갑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원인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이러한 본질을 똑똑히 보고 더욱 강력히 타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정원은 당면해서의 6.15남북공동선언을 되돌리기 위한 반통일 세력의 행동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각 대학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조작사건≫ 위협이나, 김건수씨 사건 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겠지만, 이들은 틈만 나면, 왜곡 날조로 애국세력을 탄압 구속하고, 통일의 기운을 돌려세우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정원의 행태를 즉시하고, 계기와 조건을 살려 국가정보원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의 그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어지고 있다. 최근의 ≪자주민보 사건≫ ≪테러방지법≫ 통과등에서 보여지듯이 국정원이 자신의 기반 유지를 위해 날뛰는 모습은 더욱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에 경각성을 높이고 국가정보원을 타격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당면해서 국가정보원내의 권력 다툼과 반통일 세력의 기승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국정원에 대한 타격에 응분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당면해서 지난에 수없이 많은 거짓을 폭로하고 단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수십년동안 세뇌 당해왔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거짓 정보를 총체적으로 폭로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상상하기조차 힘든 국정원의 농간의 진실을 가리우는 것으로 될 것이다.

충청총련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가로 막고자 발악하고 있는 이회창을 수괴로 한 반통일 보수 우익세력에 강한 타격을 가하는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다. 수면위로 떠오른 국가정보원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통일 세력을 척결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을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대중의 흐름과 역사의 심판을 즉시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지나날의 죄행에 대해 양심선언하고, 사죄하며, 해체하는 것이 통일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1년 12월 12일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8기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지금 우리 민중은 조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횡포무도한 정치적 탄압만행에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지난 11월말 조총련 중앙의 전 재정국장을 ≪업무횡령≫이라는 사실무근의 날조로 체포한 데 이어 수백명의 경찰과 검찰을 동원하여 조총련중앙본부와 조총련 도꾜도본부, 니시도꾜본부를 강제수색하는 전대미문의 파쇼폭거를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이같은 탄압소동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감행한 오만무례하고 불법무도한 강도적 행위이며 철두철미 조총련조직을 파괴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밑에 감행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탄압이다.

이미 일본반동들은 수백명의 경찰과 검찰을 발동하여 조은깅끼신용조합본점을 비롯하여 13개소에 대한 강제수색을 벌여 90여지함의 문서를 강제압수하였으며 조은도꾜신용조합을 무려 8시간동안 강제수색하고 전 이사장을 위시한 4명의 조합간부들을 체포하는 횡포무도한 만행을 저지른데 이어 지난 11월 30일 또다시 강제수색을 감행하였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감행한 조총련에 대한 강제수색책동은 우리 민족을 겨냥한 참을수 없는 적대적 행위이며 조총련과 재일교포들에 대한 악랄한 압살책동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한민전은 일본반동들의 이같은 만행을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행위로, 조총련과 재일교포들에 대한 비열한 정치적 탄압행위로 낙인찍고 전국민과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원래 이북을 적대시하는 일본반동들은 자국의 법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애국애족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총련을 적국 조직으로, 재일교포들을 적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조총련 조직들과 기관들에 대한 습격과 강제수색, 조총련간부들과 재일교포들에 대한 감시와 살인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최근에는 ≪국민대집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이북을 ≪테러지원국≫, ≪인권이 유린된 나라≫라고 공공연히 모략중상하다못해 이번에는 조총련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선풍을 일으킨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추종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가장 큰 희생자들인 재일교포들과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합법적 단체인 조총련을 무분별하게 걸고들며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이미 지은 죄위에 새로운 죄를 덧쌓는 용납못할 범죄이다.

이번 사건은 조총련결성이래 처음있는 노골적인 정치탄압사건이며 더욱이 미국의 테러보복전쟁에 편승하여 일본이 해외팽창야망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인 것만큼 그 엄중성을 묵과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민중과 민족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백년숙적인 일제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민중은 과거의 피의 댓가뿐 아니라 오늘의 범죄행위의 댓가까지 기필코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북에 대한 적대행위와 조총련에 대한 범죄적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부당하게 체포구속한 조총련간부들과 재일교포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며 과거죄행에 대해 우리 민족앞에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일본반동들의 민족적대시정책과 조총련조직에 대한 정치적 탄압만행을 반대하며 과거 역사의 사과와 보상을 끝까지 받아내기 위한 반일항전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릴 것이다.

주체90 (2001)년 12월 5일
서울

이회창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회창을 인간추물로 비난, 조소하며 그가 정계에서 퇴진하고 자폭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반통일광신자, 사대매국노, 파쑈살인광인 이회창에 대한 당연한 요구이다.

그러나 민심의 향방도 가려보지 못하는 정치저능아 이회창은 차기대권을 노리며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경망스럽게 날뛰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전국민의 일치한 분노와 저주의 목소리를 담아 이회창역적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주적 죄악을 고발하여 이 글을 발표한다.

추악한 사대매국노

이회창은 민족의 피와 넋이 없는 추악한 매국노이다.

원래 이회창은 대대로 민족반역과 사대매국을 일삼아온 역적의 씨종자이다.

그의 애비 이홍규로 말하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황해도와 광주일대에서 일제검찰에 협력해 반일독립운동가들을 무차별적으로 처형학살해온 악질친일주구였다.

8.15후 미국의 주구로 변신한 이홍규는 미군정과 식민지통치체제수호에 앞장서 수많은 애국자들을 색출, 학살한 공로로 경찰청과 법무부의 요직을 거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

애비로부터 매국배족의 피를 고스란히 넘겨 받은 이회창은 어릴 때부터 일본옷을 즐겨 입으며 일본말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회창은 8.15후 미국의 특별한 관심 속에 학교를 졸업하고 법조계에 나선 첫날부터 미국을 할애비로 섬기며 온갖 못된 짓을 다해 왔다.

이회창의 사대매국적 정체는 6.15공동선언발표와 미국 부시정권이 출현한 이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고조되는 각계민중의 반미운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이회창은 ≪한미관계손상≫이니,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가 우선≫이니, ≪한미동맹은 한반도문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니 하는 망발을 연이어 내뱉으며 미국상전에게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였다.

더욱이 이회창은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을 쌍수로 환영하면서 이북을 걸고 강행하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극구 찬양하였다.

미국이 있지도 않는 북의 ≪핵문제≫, ≪미사일문제≫, ≪재래식상용무기문제≫를 거들며 ≪엄격한 상호주의≫니, ≪철저한 검증≫이니 하는 것을 들고 나오자 그는 ≪미국의 입장이 한나라당의 입장과 꼭 같다≫고 환성을 올리는 추태를 부렸다.

이회창의 작태야말로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의 일선에서 선참으로 ≪마루야마≫로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쪽을 향해 ≪천황만세≫를 복창한 제 애비의 기질 그대로였다.

이회창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한반도정책을 앵무새처럼 따라외우며 민족의 생존과 3천리강토를 미국의 제물로 바치지 못해 안달아하고 있다.

이회창은 외국을 돌아치면서까지 용납못할 매국배족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지난 99년 미국과 독일을 행각한 그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을 극구 찬양하며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의 도수를 더욱 높여줄 것을 애걸하는 망동까지 부렸다.

이회창의 매국적 행태를 두고 출판물까지도 ≪미국의 현지대리인≫, ≪미국냉전주의대변인≫, ≪식민지괴뢰≫라고 조소, 규탄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내에서까지 ≪이회창때문에 저주받는 정치세력≫, ≪우리 당은 미국에 사대하는 매국당≫이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겠는가.

이회창이야말로 즉각 척결해 버려야 할 추악한 사대매국노이다.

극악한 반통일광신자

이회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해 곧잘 떠들어왔다.

그러나 그가 이른바 ≪야당≫총재를 하면서 한 짓이란 반북대결과 영구분단책동 뿐이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는 ≪통일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반역의 넋두리였고 ≪북을 동조하는 통일운동은 용납치 말아야 한다≫는 악담뿐이었다.

지난해 4월 남북최고위급회담개최를 명시한 ≪남북합의서≫가 발표되자 이회창은 이를 ≪총선용 신북풍사건≫으로 매도하면서 ≪북의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한나라당대표의 평양파견을 거부해 나섰다.

이회창의 반통일광증은 분단사상 55년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실현되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골자로 하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극도에 이르렀다.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국민이 환상에 젖어있다≫고 우리 민중의 통일열망을 심히 모독했다.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이 이행단계에 접어들자 이를 파탄시켜 보려고 갖은 못된 짓을 다 했다.

우리 민족은 물론 전인류의 환영 속에 이루어진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을 있지도 않는 ≪납북자≫, ≪국군포로≫문제를 거들며 반대했고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을 가로막는 망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까지 ≪북의 군량미보장≫, ≪북의 군사력증강≫이니, ≪퍼주기≫, ≪밑빠진 독에 물붓기≫니 하는 악담을 늘어놓으며 ≪상호주의≫와 ≪전면중단≫을 요구해 나섰다.

심지어 이회창은 ≪주적불변론≫까지 떠들며 함께 손잡고 통일해야 할 동족을 때려부셔야 할 적으로 몰아붙여 남북간의 불신을 조장해 왔다.

빈번히 최전방군부대까지 돌아치며 ≪군은 힘을 키워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남북대결과 전쟁열 고취를 일삼아오고 있는 것이 이회창이다.

이회창은 근 14조에 가까운 현재의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한다면서 전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극구 비호추동하고 있다.

심지어 이회창은 지난 6월 국제법상 허용된 북의 민간선박의 제주해협통과에 대해 ≪왜 나포하거나 사격을 가하지 않았는가≫고 하면서 동족인 북의 선박통과에 편리를 도모하지는 못할망정 총포사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행악질을 해 관계당국자들에게서까지 비난을 받았다.

우리 민중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철폐를 요구하는 ≪국가보안법≫을 이회창은 ≪통일은 못해도 ≪국가보안법≫만은 절대로 철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유지에 필사발악하고 있다.

이회창은 7천만 겨레의 통일열기 속에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참가자들의 개폐막식참가를 ≪평양광란극≫으로 심히 모독하고 그들을 ≪친북단체≫, ≪이적분자≫로 몰아붙이며 처벌하라고 고아댔다.

조국통일을 위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파탄시키기 위해 현정권의 대북관련 담당자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작전에서 그의 반통일적 정체는 더욱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바로 전 문화관광부장관이었던 박지원을 비리사건으로 몰아 떼냈으며 전 통일부장관 임동원을 평양축전에 걸어 교체하는 비열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이회창은 남북관계가 풀리면 노발대발 히스테리광증을 일으키며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쾌재를 올리며 기뻐하는 반통일미치광이이다.

하기에 이회창은 제6차 장관급회담이 결실없이 끝난데 대해 박수를 치면서 홍순영에게 전화까지 걸어 ≪잘했다≫, ≪남북대화는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까지 뇌까렸다.

이회창이야말로 조국통일을 결사반대하며 남북대결과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극악무도한 반통일광신자이다.

간악한 파쇼살인광

이회창은 ≪민주화≫에 대해 곧잘 제창해 왔다.

그러나 이회창의 ≪민주화≫구호는 반민주파쇼의 길로 질주해 온 자기의 죄행을 가리우기 위한 한갓 요설에 불과하다.

이회창은 이승만정권시기 ≪공군법무관≫으로 활약하며 애국적 군인들을 색출, 처형, 탄압하는데서 악명을 떨쳤다.

그후 박정희파쇼정권의 품에 기어든 이회창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중을 파쇼악

법과 폭압기구의 형틀에 묶어놓고 가혹한 탄압을 일삼아왔다.

이회창은 1961년 한국언론사상 최대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사건의 담당판사로 민주화를 지향하는 진보적 신문인 민족일보사의 조용수사장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등 식민지독재체제유지에 멸사봉공하면서 언론탄압과 민중탄압에 언제나 앞장섰다.

그가 지난 1983년 3월 당시 대법원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관련자들인 문부식, 김현장에게 사형판결을 내려 처형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회창이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민주인사들과 애국적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민중을 극악한 《국가보안법》에 걸어 무참히 탄압, 처형한 수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이회창이기에 그 살벌하고 소름끼치던 5, 6공시기에 자기가 대법관으로 일한 것을 지금도 떳떳하게 생각한다고 거리낌없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진보적 성향의 기자들을 향해 《씨를 말려버리겠다》, 《창자를 뽑아버리겠다》는 잔인한 폭언으로 위협공갈하며 파쇼교형리의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회창은 우리 민중의 정당한 생존권투쟁마저 《폭력》과 《난동》으로 매도하면서 신공안정국조성과 무차별적 탄압을 선동하고 있다.

추악한 사기협잡배

이회창이 법관시절 법의를 쓴 도둑왕초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파쇼권력과 정경유착으로 번식된 《검은돈의 숲》에서 이회창은 국민대중의 혈세를 짜내 배를 불리며 야당총재자리까지 따내기에 많은 돈을 뿌렸다.

지난 96년 총선때 집권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자리를 차지한 이회창은 안기부의 4,900억원예산중 1,200억원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불법유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대통령권좌를 꿈꾸며 지난 97년 대선에 나서 국세청까지 동원해 선거자금을 긁어모은 세풍사건의 장본인도 다름아닌 이회창이었다.

세상에 그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온갖 교활하고 능란한 수법으로 이회창이 긁어모은 돈과 재산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부정축재한 돈과 국민혈세로 선거때마다 금전을 살포해 민심을 혼란시키고 호화성여행과 해외행각을 벌이며 일신의 부귀영달과 권력야욕에 환장이 돼있는 이회창은 《청렴결백인사》인양 자처하며 국민을 기만우롱해 왔다.

지난 97년 대선때 불거져 나온 《아들병역비리》사건은 썩은 구린내를 풍기는 《넥타이맨 비리왕초》로서의 이회창의 더러운 정체를 그야말로 극명하게 발가놓으며 오늘도 우리 국민들을 분격케 하고 있다.

이런 부정부패왕초가 지금 주제넘게도 대권을 넘보며 권좌를 타고 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회창은 《조선일보》 등 극우보수대변지를 매수하여 여론조성에 열을 올리면서 대통령당선을 위한 전략문서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심지어 2억원이상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부친생가복원》이라는 광대극까지 벌여놓아 국민적 비난과 규탄을 받고 있다.

이회창이야말로 부정부패로 생존하고 있는 추물중의 추물이다.

* *

민족, 민중을 등지고 사대매국과 분열책동에 광분하면서 부정축재와 대권욕에 환장이 돼있는 이회창의 만고대죄악은 추호도 용인될 수 없다.

전국민은 민족의 우환단지인 이회창을 국민심판대에 끌어내어 그 죄를 따지고 단호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90(2001)년 12월6일
서 울

≪평화통일의 교두보, 금강산 평화관광 살리자≫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가칭)≫ 발족 예정

경실련 통일협회(이사장 김성훈)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금강산 평화관광을 살리기 위한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가칭)≫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일 금강산 해금강 호텔에서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은 단순관광이 아닌 민족화해를 위한 평화관광으로,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금강산 평화관광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지난 11월까지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의 수는 약 4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89년 이후 10년간의 북한 방문자 수가 약 6천명이었던 것을 비교할 때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물적. 인적 교류로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북한당국의 약속불이행, 남한정부의 방관, 일부 언론과 야당, 보수세력의 방해로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며 남북한 당국의 상호 약속이행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오는 13일 발족 예정인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가칭)≫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곽태환 박사(전 통일연구원 원장), 이장희 교수(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 김규철(시민사회아카데미 남북포럼) 원장, 박인환 변호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위원장), 김승국 박사(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보위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08



늦봄 문익환 시비 서울역 건립 추진키로

통일맞이 총회 및 송년의 밤 가져



《평양가는 기차표를 다오》

경의선 시발역인 서울역에 늦봄 문익환 시비가 내년 월드컵 이전에 세워질 예정이다.

8일 오후 5시 늦봄 문익환 목사의 유지를 기리며 통일운동을 실천하는 사단법인 통일맞이가 《2001 통일맞이 총회 및 송년의 밤》을 갖고 시비 건립 등 문 목사 추모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기독교회관 2층에서 이재정(국회의원)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정도상 사무처장은 2002년의 핵심사업으로 《늦봄 기념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역에 시비를 건립하는 것을 비롯해서 중국 용정 생가에 2003년부터 늦봄 기념관을 건립하고 늦봄 통일 시선집 발간과 논문 공모사업, 학술연구 및 보급사업, 기념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해 총회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지난 두차례 진행되어 호평을 받았던 《휴전선 평화통일대행진》을 내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에 걸쳐 16박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원호(문 목사 방북 동행), 김희선(국회의원), 황인성(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유원규(한빛교회 담임목사)씨 등이 신임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정관개정과 2000년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 2002년 예산안 등이 검토 의결되었다.

신임이사로 선임된 유원호 이사는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삼천리철도법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업을 통일맞이가 받아들여 《통일맞이 운동을 북한 땅까지 넓혀 통일맞이 평양 사무소를 개설하자》고 말했다.

삼천리철도법인은 일본 교포들이 중심이 되어 경의선 연결을 위한 철도 침목과 선로 등을 교포들의 직접모금으로 마련하고 이 모금액의 절반씩을 남과 북의 정부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교포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9억 여원의 기금이 모아졌다고 한다.

김재규 사무처장은 이날 총회에서 늦봄 기념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데 대해 《이 사업은 문익환 목사 한 사람을 기념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재의 통일운동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답을 찾는 연구와 사업을 포함한다》고 말했으며 삼천리철도법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삼천리법인과 연대하는 형식으로 삼천리법인의 교포 모금액을 통일맞이가 남과 북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10

대북적대시정책철회 비상경계조치해제 집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3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비롯한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통일애국열사 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서총련소속 대표들은 지난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와 당국의 비상경계조치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그에 편승한 당국의 비상경계조치로 말미암아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사실에 언급하고 그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그에 편승한 군당국의 반북책동으로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있은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온 겨레의 관심을 모았던 남북관계개선분위기는 부시행정부출범이후 자행되고 있는 대북강경책동으로해서 소강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시행정부가 출범하기 바쁘게 전 정권의 북미관계개선분위기를 깨고 대북강경정책을 또다시 펴면서 조미관계를 다시 대결관계로 돌려세웠는가 하면 그 무슨 대비를 운운하며 이땅에 무력을 증강하고 북에 당치않은 요구를 강요하며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얼마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습격사건을 계기로 있지도 않은 이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운운하며 이북에 대한 사찰을 내두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책동의 위험성을 그대로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반북책동이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마다 *** 반북책동의 일환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벌이고 있는 대북강경책동 역시 남북의 6.15남북공동선언이행과 화해분위기를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다시 대결원점으로 돌려세우려는 기도에서 출발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군부호전세력과 일부 보수세력들이 미국의 이같은 책동에 편승해 반북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최근에만도 미국에서 일어난 기습사건을 구실로 북을 겨냥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북을 또다시 주적으로 선포한 것 등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군부호전세력들의 이같은 반북책동으로 해서 제4차 이산가족상봉이 파탄되고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는 등 남북의 화해와 교류를 파탄내려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전세력들의 이같은 행위가 계속 자행될 경우 남북의 화해와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군당국의 비상경계조치가 취해지기 바쁘게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각계시민단체들이 ********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철회와 군당국의 비상경계조치해제를 요구해 나선 것은 민의를 반영한 매우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국과 군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북적대정책과 비상경계조치를 당장 해제해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또다시 미사일요격시험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7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다만 미국방부는 4일 미국 현지시간으로 밤 10시 30분께 전번 시험때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남태평양상공을 향해서 발사된 개량형 ≪미니트맨Ⅱ≫시험미사일을 콰잘레인 환초에서 요격미사일을 쏴 격추시키는 방법으로 미사일요격시험을 했습니다.

미국방부는 이번 시험이 성공적이였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의 요격미사일전문가들과 미사일방어체제관계자들은 요격체가 발사되기전 ***이탈이라는 정확한 자료가 입력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수 없다며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공적이든 아니든 어떻든 미국이 내외민중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넉달 20일만에 다시 이같은 요격미사일시험을 한 것은 군비경쟁을 막으며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 세계진보적 민중들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 아닐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또다시 요격미사일발사시험을 한 것은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는 이북을 핵선제타격하고 핵미사일독점권을 차지해 대국들을 견지해 제압하며 미군수산업독점체들에 폭리를 주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최초의 목적은 이북을 선제타격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10월 월포비츠 미국방부 전 장관이 미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방부가 첫단계로 2004년초까지 개발되는 **요격미사일을 한반도에 배비하겠다고 공언하고 미국방부담당 대통령보좌관이 북한 근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배비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범죄적 책동을 실현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문제를 걸고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3년전에 이북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미사일발사라고 억지를 쓰면서 이북이 미국을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그것을 요격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저들의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부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이 우리 민중과 겨레에게 무서운 핵참화를 덮씌우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며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된다는데 그 위험성과 범죄성이 있다는 것은 감출수 없는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와 더불어 전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이 그처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반대해 투쟁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무조건 중지해야하며 이 땅에 배치한 1천여개의 핵무기와 저들의 침략군을 즉시 철수시켜야 합니다.

각계 국민들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의 위험성과 엄중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모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간과할 수 없는 주한미군 전력증강책동

반일천 / 구국전선 제462호, 주체90(2001)년 12월 11일



미국이 한국과 그 주변에서 침략무력증강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 생긴 전력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밑에 지난 10월11일 미국본토에서 1개 대대급의 공군부대를 끌어다 한국땅에 새로 배치한 후에도 계속 무력증강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 미국은 ≪비상경계≫상태에 있는 한국에 본토로부터 끌어온 공군전투기들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새로 배치하였다. 오산, 군산, 수원 등 이미 한국에 배치한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중요장비들에 대해서는 ≪성능개량≫작업을 벌이고 한국동해에는 새로운 항공모함, 최신예 ≪이지스≫함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유사시 긴급출동시킬 4개의 ≪신속타격≫여단을 편성한다고 발표한 후 ≪AH-X≫공격용헬기 36대와 각종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작전용 ≪MH-47E≫헬기들을 대구기지 등에 새로 배치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최신특수작전용 헬기 ≪MH-47E≫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미국에서 편성된 헬기의 이용을 전문담당할 160특수작전 항공여단소속의 ≪에코≫부대와 그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된 607지원대대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에 이용될 ≪스탠다드≫미사일발사대와 관련부품을 ≪판매≫라는 이름밑에 한국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병력의 ≪축감≫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 축감된 병력을 한국과 그 주변에 재배치하려 하고 있다.

토마스 와이트 미육군장관은 부시행정부의 새 군사전략에 따라 유럽에서 이동되는 미군무력이 아시아지역 특히 한국에 집중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벌써 유럽에서 이동되는 미군장비들이 한국에 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보복전략과 관련해 한반도에 생긴 ≪전력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이 저들의 무력증강책동을 합리화해 보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은 북침야망을 실현해 보려는데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때에 미국이 주한미군전력을 계속 증강하여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력증강놀이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하며 하루빨리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용단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미국 의원인가≫

600여 시민사회단체,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기자회견 가져



아프간 전쟁 한국군 파견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 7일,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고 있으며 6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공동실천)≫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공동실천 소속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성유보 이사장은 ≪아프간 전쟁으로 한반도가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젊은이의 피와 돈을 이 전쟁에 대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유보 이사장은 ≪이를 통과시키려 하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아닌 미국의 정치인이며 국회의원≫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베트남 파병안이 국회 상정시 박정희 독재정권하에서도 국회 재적의원 175명중 전쟁지원 찬성 95명, 반대 27명, 결석 50명, 기권 3명이었는데 이번 아프간 파병 동의안은 여야 정치인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민족적 양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홍근수 상임의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제적 정의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쟁 가담에 줄을 선다면 전국민적인 지탄과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김종일(자통협) 사무처장의 사회로 규탄집회를 가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부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아프간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금 국회가 결의해야 할 것은 한국군 파병이 아닌 주한 미군 철수 동의 안에 결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회원과 다함께 김광일(경희대 모임대표) 학생이 규탄 연설을 진행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녹색연합, 민주노총, 통일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KYC(한국청년연합회) 등도 5일과 6일 각각 성명을 내고 아프간 전쟁의 한국군 파병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 한국군 파병 안을 상정해 여야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내일도 공동실천이 낮 12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째 한국군 파병을 비롯한 시국사안을 가지고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시국농성을 벌이고 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06

≪미국, 확전 의도 분명하다?≫

≪공동실천≫, 파병안 국회통과 규탄집회 개최



≪의미 상실한 아프간 전쟁에 파병한다는 것은 확전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공동실천)은 7일 낮 12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아프간 파병관련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종일(자통협)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박석운(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김흥현(전빈련) 의장, 이천재(전국연합) 공동의장, 서경원(자통협) 상임고문, 김영규(인하대) 교수 등이 규탄연설을 통해 확전과 한국 전투병 파병 저지를 위한 투쟁결의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중연대 주제준 조직국장은 ≪탈레반 정권이 항복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파병은 중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파병한다는 것은 확전의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전세계와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준 조직국장은 정부가 의미를 상실한 파병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15일 예정인 ≪반전 평화 범국민대회≫는 거대한 민중집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또한 김판태(소파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도 아프간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에서의 한국군 파병은 ≪확전의 의도와 미국의 패권전쟁에 적극 동조 가담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파병 비용 587억원(국방부 공식 발표)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 등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국내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국민여론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일본에서 이미 대규모 수송단을 파견한 상황에서 130명 규모의 의료지원단을 제외한 320명이 해군. 공군 수송단으로 파견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전투병 역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어 김종일 사무처장은 앞으로 20일부터 진행될 ▲파견을 저지하는 투쟁을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전개하는 것을 기본 축으로 하고 ▲≪파견의 악영향에 대한 대국민 선전≫ 전개 ▲국민염원 저버린 보수정치인들에 대한 강력한 선도투쟁 전개 등 세 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있을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에 의하면 파병부대가 오는 18일 창설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무에 착수한다고 국방부가 7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후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07

주한미군 영구주둔 음모, 용산기지 아파트 건설

시민사회단체, ≪용산기지內 아파트건설 백지화 촉구≫ 나서



미국의 용산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설은 미군의 영구 주둔을 위한 검은 음모라며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미군기지공대위, 소파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30여명은 10일 오전 11시 용산미군기지 52번 게이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미군의 용산 미군기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추진에 대해 이의 백지화와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촉구했다.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한미군이 용산 미군기지 내에 1,066 가구가 들어서는 4만 5,000여평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영구주둔을 획책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이러한 계획은 지난 90년 우리 정부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96년까지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하겠다고 합의한 바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으로 국가간의 합의마저 파기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한미 소파 양해사항 제3조 1항인 ≪공여 시설에서 당초 건물의 개조나 철거, 신축, 개축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는 규정조차 어기는 불법 행위이라고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최규엽 집행위원장은 취지 설명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은 미국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미군기지를 반환하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결코 평화적으로만 싸우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표한, 이후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7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12/11일 오후 2시) ▲SOFA 분과회의 장소 앞 1인 시위(12/13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용산 미군기지 반환 촉구 용산주민 반미한마당(12/22일 오후 2시) ▲용산 미군기지 반환 2차 월례 시민대회(12/29일 오후 3시 용산역 광장)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외에도 불교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불교인권위원회(준), 광주 승보회, 승려 시인회 등 불교계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한 미군의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발로 시민사회단체의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10일자에 의하면 고건 서울시장도 주한미군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의 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전망이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경찰의 저지로 20여분 동안 마찰이 빚어져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못했다.

오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지인 52번 게이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경찰뿐 아니라 주한 미군 측도 여러 명이 나와 주위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10

시민사회단체, 용산기지 아파트 건설 부지 확인

2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개최



용산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설문제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직접 확인하고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60여명은 11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마당에서 ≪용산 미군기지 아파트 건립 반대! 아프간 파병 반대!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 미군 주둔비 인상 반대! 2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를 갖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립 부지를 직접 확인했다.

김용한(기지 공대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문정현 신부는 대회사를 통해 아파트 건립 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풀릴 수 없다며 주저앉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김종일(매향리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에디오피아 수준에 맞먹는 불평등한 소파가 존재하고 또한 이 불평등한 소파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의 아파트 건설 계획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지난 7월 16일 파주 미 2사단 캠프하우즈에서 전기 감전으로 팔과 다리를 잘린 전동록(55세)씨의 큰 아들 전민수(25세)씨가 나와 아버지의 사고내용을 말했다.

전민수씨에 의하면 미군은 위로금조로 60만원을 전동록씨에게 주고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동록씨 가족은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민수씨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을 모두 망친 주범이 아무 말도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는 이후 주한미군의 만행 근절을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건설연맹 장광수 통일위원장의 미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 낭독이 있었다.

항의서한 낭독 후 박기학(자통협) 정책위원장과 임찬경(주미철본) 공동의장이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미대사관 측의 불법집회에 따른 항의서한은 접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 무산됐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52번 게이트로 이동해 약식규탄 집회를 가졌다.

김판태(소파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규탄 집회에서 문정현 신부는 ≪불법적인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여기 왔≫다고 외치며 ≪비록 수가 적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켜보고 있는 미군들을 향해 영어로 같은 내용을 외치기도 했다.

정상길 중앙대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미8군에서 중앙대 총학생회로 팩스를 보내 서로 잘 지내보자고 해왔다≫고 밝히고 ≪집 없는 민중들이 집 짓고 살아야 할 터에 아파트를 짓고 영원히 살려는 미군들이 있는데 어떻게 서로 잘 지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미군기지를 반환 받는데 중앙대 학생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집회를 마무리한 참가자들은 근처의 ≪크라운호텔앞 보도육교≫ 위로 이동해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인 미군 연립주택 단지를 둘러보고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

김판태 사무처장에 따르면 이 부지는 4만 5천여 평으로 앞으로 8층 건물 20개동 총 1,666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경찰관계자는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아파트 건축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 미8군과의 갈등이 예상되며 생각보다 큰 파장이 일 수도 있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12

20대 사이버 정치비평가, 이회창 쏘다

≪이회창 대통령은 없다≫ 펴낸 ≪절망의 강≫ 이태준 씨

그 동안 이회창 총재와 관련된 저서는 극히 드물었다. 이 총재가 직접 쓴 ≪아름다운 원칙≫과 그의 만화 자서전인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회창 이야기≫ 등이 고작이다. 그리고 한 언론인이 쓴 ≪대쪽 판사 이회창 이야기-법이 서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긴 하지만 ≪대쪽 신화≫와 ≪이회창 신드롬≫에 편승했다는 인상이 짙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출간된 ≪이회창 대통령은 없다≫는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총재를 본격적이자 총체적으로 해부한 ≪최초의 이회창 비평서≫인 셈이다.

저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네티즌인 이태준(29) 씨. 그는 인터넷 공간에서 ≪절망의 강≫이라는 아이디로 더 유명하다. 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안티창 사이트≫(www.critizen.net)에 100회의 ≪이회창론≫을 연재하면서 ≪사이버 정치비평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쪽 신화≫에 대한 자질검증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회창 총재를 ≪검증≫의 도마 위에 올려 놓은 이태준 씨. 12월 7일 오후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저자≫보다 ≪저서≫에 주목해 달라≫며 사진찍기를 정중히 사양했다. 기자가 ≪책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고 선정적≫이라고 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책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회창 대세론에 대한 반격의 차원이다.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회창 대세론≫의 분위기가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상징적 차원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총재가 3김 이후의 대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일보≫ 논조를 보면 이회창 시대를 읽을 수 있다. 그는 ≪조선일보≫의 역사나 논조에 반하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남북문제가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개혁도 요원해질 것이고 재벌개혁도 물 건너갈 것이다. 나는 이회창 시대를 보수 수구세력의 부활로 본다.≫



책 속에서도, 그의 육성에서도 이 총재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동일하게 읽혀졌다. 하지만 그는 최소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신문과 잡지 등 미디어자료에 의존했다. 그는 이미 1997년부터 당시 대권주자들이었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김종필 등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왔다. 그 자료파일만 해도 1백 권에 이른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회창≫을 글쓰기의 화두로 붙들었을까.

≪일단 정치학도로서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이회창 총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그가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범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대쪽 신화≫와 ≪이회창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특히 당시 학생운동권을 비롯한 민주세력들이 그를 개혁적 인물로 평가하며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 그가 민주주의나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말이다. 그게 이상했다. 다른 하나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그의 사회적 영향력은 큰데도 그에 대한 자질검증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번 책에서도 ≪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가의 중대사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검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라며 ≪나는 이 책이 결코 독자들에게 단순한 이회창 총재 비방서로 읽혀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다.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에 대한 ≪자질검증서≫로 읽어 달라는 얘기다.

보신주의=≪양지≫ 이데올로기+≪실리≫ 이데올로기

≪이회창 대통령은 없다≫는 총 10개의 마당(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이회창 대세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첫째마당에서 ≪이회창 대선가도의 아킬레스건≫을 9가지로 정리해놓았다.

≪(1)남북협력 이벤트와 용공조작 불가 (2)영남지역주의의 동요 및 부메랑: 이회창은 영남후보가 아니다 (3)이회창 비토세력들의 이합집산 (4)언론의 독점적 지지 와해 및 다원화 (5)아들 및 친인척 병역문제 (6)부친 친일의혹이란 강력한 화두 (7)조용수 사법살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 규명 (8)여당에서 야당으로 출마하는 열악한 조건 (9)3김 이후의 대안 제시 실패, 자질론 부각≫

이 가운데 ≪언론의 독점적 지지 와해 및 다원화≫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그는 이 총재가 언론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특혜는 과거에 비해 매우 협소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신문이 그리고 모든 방송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시대가 지났다. … 신문과 방송 외에 인터넷의 활성화도 언론의 독점적 지지체제를 와해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해 이는 ≪조선일보≫의 논조와 영향력 하나가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시절이 지났음을 의미한다.≫

둘째마당에서 저자는 이회창 총재의 퇴행은 ≪변절≫이 아니라 ≪본질≫이었다고 ≪폭로≫한다. 그는 이 총재 퇴행의 본질을 ≪양지 이데올로기≫와 ≪실리 이데올로기≫라는 흥미로운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다시 그의 육성을 들어보자.

≪강준만 교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징을 ≪승리 이데올로기≫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이 총재의 특징은 ≪양지 이데올로기≫와 ≪실리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이 총재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것이다. 법관 시절부터 신한국당 입당, 그리고 최근까지 그는 ≪양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벗어나 저항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커다란 탄압이 없는 선에서 저항할 뿐이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시절 그는 와이에스에게 저항했다. 하지만 와이에스보다 더한 박정희나 전두환에게는 저항하지 않았다.

신한국당에 입당하기 전 많은 사람들은 그가 (꼬마)민주당이나 시민·재야단체로 갈 것이라고 희망했다. 하지만 그는 신한국당에 입당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지만 난 그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본다. 철저하게 양지 이데올로기와 실리 이데올로기에 충실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를 과신했다. 조중동과의 유착, 보수기득권에 어필하는 대북정책, 영남과 충청을 볼모로 한 지역주의 등 모든 것이 다 대권을 향한 실리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를 통해 그는 대쪽신화와 이회창 신드롬의 해체를 주장한다. 즉 ≪자신의 인생 중 단 한 번도 권력의 양지에서 소외되어 본 적이 없는 인물에게 ≪대쪽≫이라는 별칭을 붙여준 건 애초부터 모순을 동반한 논리였다≫는 것이다. 그는 둘째마당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끝내고 있다.

≪그렇다. 거품신화는 ≪검증≫에 의해 몰락하게 돼 있다. 때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검증으로, 때로는 현재의 행위에 대한 ≪검증≫으로 말이다. 진실은 늘 거짓 혹은 위선과 대립하는 생명력을 유지하며 결국 승리하는 저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3김과 싸우면서 3김을 닮아버린 ≪대쪽≫

10개의 마당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역시 셋째마당과 닫는 마당이다. 저자는 셋째마당에서 ≪이회창의 8도 고향론≫을 통해 ≪뿌리 잃은 한국식 대쪽의 정치적 실리를 위한 비인간적인 너무도 비인간적인 처세술≫을 꼬집고 있다. 저자가 직접 작성한 ≪이 총재의 8도 고향론≫이란 다음과 같다.

≪황해도 서흥은 태어난 고향. 충남 예산은 선조 대대로의 고향. 전남 담양은 어머니 고향. 경남 산청은 아내의 고향. 대구는 정치적 고향. 부산은 마음의 고향. 서울은 한때의 고향. 전주는 나의 본관(전주 이씨)이 서려 있는 고향. 고로 ≪KBS 6시 내 고향≫에 등장하는 고향은 다 내 고향(?).≫



과거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 이 총재는 자신의 프로필에서 ≪서울 출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1996년 총선 때부터 자신의 고향을 ≪충남 예산≫이라고 얘기해오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득표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즉 ≪≪황해 출생론 및 예산 고향론≫이 ≪서울 고향론≫에 비해 훨씬 더 남은 장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처럼 ≪기가 막히는 이회창의 고향변천사≫는 철저하게 ≪실리 이데올로기≫를 밑바탕에 깔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또한 닫는 마당에서 ≪이회창과 3김의 공통점 10가지≫를 분석해놓고 있다. 한국정치의 병폐를 모두 모아 놓은 듯한 10가지 공통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1)지역주의를 사랑한다 (2)씨족 연고를 사랑한다 (3)1인 사당정치를 사랑한다 (4)인맥정치를 사랑한다 (5)부정연루 인사를 사랑한다 (6)권언유착을 사랑한다 (7)부패정치를 사랑한다 (8)독선과 아집을 사랑한다 9)한풀이식 정치를 사랑한다 (10)국민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

저자는 이 총재가 ≪3김 청산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며 한국정치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이야기해왔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이 총재가 과연 3김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싸우면서 닮는다고 했던가. 3김 청산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았던 이 총재도 결국 3김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갔던 것이다.

이 외에도 ≪이회창의 반통일론≫ ≪이회창식 안티행위의 특징≫ ≪엘리트론과 법치주의의 허구성≫ ≪이회창의 사이비 언론관≫ ≪감동이 없는 이회창 정치≫ 등의 내용들도 돋보인다. 특히 한때 논란이 되었던 이 총재 부친의 친일의혹문제를 추적한 월간 ≪말≫의 기사를 특별기고마당에 수록해놓고 있다.

저자는 ≪이회창 지지자들에게는 디제이에 대한 반감만 있을 뿐 왜 이 총재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논리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래서 그는 ≪이회창 지지자들도 이 책을 읽고 이 총재가 정말 3김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여러 사람들의 인물비평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인물비평의 전형을 고민할 것이라고 한다. 그가 다음에는 어떤 사람의 인물비평서를 들고 나올지 벌써 궁금해진다.

구영식 기자 ysku@digitalmal.com

≪≪민족일보≫ 사건은 ≪사법살인≫이었다≫

40주기 추념학술회의에서 쏟아진 목소리



≪≪민족일보≫ 사건은 ≪사법살인(재판에 의한 살인)≫이다. 반드시 재심을 청구해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식·비공식적으로 몇 차례 언급했는데, 그는 눈만 껌벅거리며 모른 척하고 있다. 재판에 관여했던 심판관들은 현재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은 차기 대통령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들의 양심적 증언이라도 들어 보아야 한다. 잘 했으면 잘했다 또는 잘못 했으면 그 사정과 사죄의 소리를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법조인이라면 법조인의 윤리와 한 시대의 사건의 당사자였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한상범 동국대 교수·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진주 출신의 조용수(1930~1961) 선생이 ≪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 당한 지 꼭 40년 만에 학술회의가 열렸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40주기 추념 학술회의가 지난 8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는 ≪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자동)가 주최하고, 4월혁명회·민족문제연구소 등의 후원으로 열린 것이다.

오후 1시 30분. 얼마전 문화방송에서 제작·방송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상영되었다. 200여 명의 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회는 이만열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4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민족에게는 장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조용수 사장은 악법(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 당했다. 그가 국가보안법으로 처형된 슬픈 역사를 되씹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 다시금 교훈을 찾아 민족사에 부끄럼 없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박정희가 왜 ≪민족일보≫ 사건을 만들었으며 조용수를 사형으로까지 끌고 갔는가.

(2)≪민족일보≫ 사건의 재심은 가능한가.

(3)당시 ≪민족일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정당한 법률이었나.

박정희는 왜 조용수를 사형까지 집행했나

원희복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은 ≪민족언론인 조용수 선생≫이란 발제를 통해 왜 박정희가 조용수 당시 ≪민족일보≫ 사장을 사형에까지 처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정희가 그를 사형시킨 이유에 대해선 여러 추론이 가능하지만 박정희 자신의 사상적 문제를 감추지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홍석률 서울대 강사도 ≪4월혁명 정국과 민족일보≫라는 주제발표에서 다음과 말했다.

≪쿠데타 지도자였던 박정희는 좌익 혐의로 체포되었던 경력이 있었다. 또 박정희는 4월혁명 직후 부산 군수기지사령관으로 있을 때 이 지역의 국회 해산 데모가 조총련 자금에 의해 조종되고 있으며, 그가 시위대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수 정치인들이 의혹을 제기해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다.≫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도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친일 경력이 있는 박정희는 남로당 활동 전력이 있으면서 미군에 프락치 역할을 했다. 같이 활동한 남로당 명단을 넘기면서 살아 남았던 것이다. 쿠데타를 비판한 ≪민족일보≫를 쳐야만 그가 우익 보수 정치인들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조용수 선생을 사형까지 끌고 간 것이다.≫

박정희는 과거 일제시대에 친일 경력이 있고, 좌익 혐의로 체포된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우익 정치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혁신계 인사를 탄압했고, 대표적으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해석이다.

재심은 가능한가

1961년에 일어난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40년이 지났지만 재심이 가능한 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상범 동국대 교수는 ≪≪민족일보≫ 사건은 ≪재판에 의한 살인≫ 즉 ≪사법살인≫으로 재심이 가능하다≫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공대 이철호 교수(헌법학)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도 5·16쿠데타를 ≪5·16혁명≫이라고 하는 어용학자들이 있다≫면서 ≪박정희는 친일행적, 쿠데타, 통일운동 방해 등으로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용수 선생의 사형 선고와 집행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한 증거였던 이영근(재일교포)이 간첩이었고 그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그를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고, 이영근은 이후 박정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허위증거에 의한 재판이었기에 반드시 재심 사유가 된다.≫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정당한 법률이었나

조용수 사장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한상범 교수는 ≪이 법률 6조를 보면 ≪정당·사회단체 주요간부의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 신문사에서 동창회나 친목 계모임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교수는 더 나아가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만들었는데 절차도 어긴 위헌법률이었다≫라고 일축했다.

≪민족일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주제발표 외에도 ≪군사정권과 언론≫이라는 주제로 ≪민족일보≫ 사건을 접근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손석춘 ≪한겨레≫ 여론매체부장은 ≪군사정권하의 한국언론≫이란 발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제한된 독과점 시장에서 신문사들은 민중 배제적인 경제성장정책의 과실을 고스란히 따먹으며 기업으로 성장했다. 실제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구속된 바로 그 날 ≪조선일보≫는 ≪제2단계에 돌입한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하여≫(61년 5월 19일자) 제하의 사설을 내고 쿠데타를 찬양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혁명완수로 총진군하자≫(61년 5월 26일자)에서 쿠데타에 대한 비판이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자생활을 비판적으로 회고했다.

≪고3 때 ≪민족일보≫ 사건을 접했다. 대학 졸업 후 ≪동아일보≫가 ≪민족지≫라고 생각하고 들어 갔는데 막상 가 보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군사독재정권의 총칼만 없을 뿐이지 그 체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인데, 이 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반통일≫ ≪반민족≫ ≪반민중≫ 행위를 일삼는 언론들이 ≪언론자유≫를 주장하고 있으니 문제다.≫



윤성효 기자 cjnews@thrunet.com
2001/12/11 ⓒ 2001 OhmyNews

이회창 총재의 김정일국방위원장 답방 반대를 규탄하는 부산민청 성명서

우리는 이회창 總裁의 김정일국방위원장 서울답방 반대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지난 8일 한나라당 중앙당사 총재실에서 진행된 부산일보와의 ≪당대표, 대선주자 연쇄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년에 서울에 와서는 안되며 국민들도 이를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내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이뤄질 경우 남북정상회담이 각종 선거와 관련해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이회창 총재는 국민의 의사와 염원을 호도하지 말라.

6.15남북공동선언은 7천만 우리겨레의 가슴을 흥분과 감동으로 격동시켰다. 그 이후 남과 북은 이산가족상봉과 경의선 철도복구, 경제교류협력 등을 진행했고 정부당국간의 회담과 각계각층 민간교류를 통해 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향한 분주한 발걸음을 옮겨왔다. 국민들과 우리겨레가 봇물 터지듯이 열린 통일의 분위기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였는가? 분단 50여 년 만에 이토록 통일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요구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 의사를 무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는 것은 역사적 대죄를 짓는 것이다. 이회창 총재가 진정 국민의 의사를 체현하고자 하는 정치인이라면 즉각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2. 이회창 총재는 정략적인 대권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통일의 대하에 합류하라.

이회창 총재는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수에 육박하는 거대야당이 된 후 모든 관심을 오로지 대선에 두고만 있다. 표결집을 위해 선심성 법안을 올리려다 여론에 부딪혀 철회한다든지, 민생과 경제를 우선시 하겠다하면서도 전국을 돌며 당원대회나 하는 등 세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은 야당총재가 아니라 대권에 환장한 정치모리배를 연상케 한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대권놀음에 방해가 된다고 남과 북의 합의사항이자 민족의 요구인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한다는 것은 시정잡배의 억지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회창 총재는 기만적인 대권놀음의 꿈에서 깨어나 겨레의 도도한 통일대하에 합류하기를 바란다.

3. 역사에서는 마지막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이회창 총재는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열어갈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문을 역사적 민족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민족통일의 길에 나서라.

항일역사에서 처음에는 사대와 친일을 했더라도 마지막에 민족을 위한 길에 선 사람은 애국자라 했으며 처음에 반일과 독립운동을 했더라고 마지막에 친일을 한 이는 결코 애국자라 하지 않았다. 비록 이회창 총재도 지금까지는 국민과 민족의 편에 서 있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애국과 통일의 진심을 가진다면 역사는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과 국민의 절절한 바램과 염원을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즉각 통일의 대업을 대권놀음에 희생시키지 말고 민족통일과 재생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이름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 강력히 주장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반대라는 망발을 철회하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려거나 통일의 민족적 흐름을 거스르는 길을 포기하라.

이제라도 진정한 국민의 입장, 민족의 입장으로 서서 남과 북의 화해와 교류협력 평화통일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1년 12월 11일

겨레의 희망 민중의 벗 부산민족민주청년회

한나라당은 대북대결 정책 조장하는 남북교류 협력법, 남북협력 기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유구한 오천년의 역사를 한민족의 이름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분단 56년은 영원한 헤어짐의 시작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강요된 분단을 종식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루어내어 민족의 번영과 전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의 시간이었다.

민족의 통일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은 작년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 선언의 채택으로 인해 더욱더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었으며 경의선 복원, 이산가족 상봉, 수차례의 장관급 회담, 경제협력 위원회 구성, 민간급의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등을 통해 그 실현의 과정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수 있었다.

이제 공동 선언을 이행에 합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를 가름짓는 척도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간 한나라당이 보여준 모습에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함께 손맞잡고 통일로 함께 가야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주적론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와 이남의 모든 진보적 양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서도 절대불가방침이며, 역사적인 전민족의 만남이었던 평양 통일 대축전을 ≪평양 광란극≫이라며 색깔론 시비에 혈안이 되었던 곳이 한나라당이었다.

이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원칙한 대북지원을 견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힌다≫는 명목으로 남북교류 협력법과 남북협력 기금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핵심 골자를 보면 첫 번째로 ≪남북교류 협력 추진 위원회≫를 국회의석 비율로 전문가를 추천하여 구성하며, 대북 사업의 승인, 조정, 취소권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자민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다수의석의 횡포를 이용하여 두당이 보여왔던 대북대결 정책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난 평양에서의 민족통일 대축전을 ≪평양 광란극≫이라며 매도한 전례를 볼 때 대북사업의 조정, 심의, 취소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세력들의 민간급 교류를 원척적으로 막아 나서겠다는 의도로밖에 볼수 없다.

두 번째로 남북협력 기금의 대폭 삭감과 기금의 조성, 사용에 대한 국회동의를 의무화하자고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고 원천적인 민간급의 화해 협력, 교류 정책을 통제하고 나서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듯이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의 자주통일의 이루고자하는 칠천만 겨레의 위대한 행보를 한나라당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존의 대북대결 정책을 철회하고 남북간 화해, 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러한 민족과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남북교류 협력법과 남북협력 기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악하려 한다면 부경총련 20만 청년학생들은 450만 부산시민들과 함께 법안저지 투쟁과 한나라당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언제나 줏대있는 조국의 자주통일 선봉대
11기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 연합(건)

내가 ≪조선≫이 주는 상을 거부했더니

박평식 씨, 청룡영화상 ≪영화평론상≫ 수상 거부



한 중견 영화평론가가 지난 10일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제22회 청룡영화상 영화평론상 수상을 거부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선일보와 관련된 상을 문화예술인이 공개적으로 뿌리친 것은 작년과 올해 소설가 황석영 씨와 공선옥 씨가 각각 ≪동인문학상 후보에 오른 것을 거부한다≫고 표명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영화 ≪초록물고기≫로 이미 청룡영화상을 수상했던 영화제작자 겸 배우 명계남 씨도 12일 ≪청룡영화상을 거부하자≫고 촉구, 청룡영화상이 다시 한번 문화예술계에 ≪안티조선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영화평론가 박평식(51) 씨는 12일 오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0일 청룡영화상 사무국으로부터 ≪영화평론상 수상자로 결정됐으니 11일 오후2시 조선일보사 2층 시상식에 참석해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수상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시상식 참석 대신 ≪≪정영일 영화평론상≫을 거부하며≫라는 제목의 편지를 사무국에 보내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씨는 편지에서 ≪≪정영일 영화평론상≫은 대선배의 업적을 기리는 명예로운 상이지만, 2001년 한국에서 이 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결코 기쁨만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며 ≪문제는 청룡영화상을 주최하는 스포츠조선과 후원사인 조선일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처럼, 조선일보는 이미 신문의 역할과 힘을 넘어서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씨는 계속해서 ≪그들이 쌓아올린 오만과 자신을 반대하는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증오는 우리나라에 무수한 비극을 양산하고 있고, 그것은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벌어졌던 ≪애기섬≫을 둘러싼 문제는 조선일보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본다≫고 밝혔다.

≪애기섬≫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한 민초의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민족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한 다큐멘터리식 극영화로, ≪조선일보≫의 자매지 ≪월간조선≫은 10월호에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을 뽑고 22쪽 분량의 기사를 통해 ≪여수 14연대 반란 진압을 양민학살로 몰고간 영화 ≪애기섬≫ 제작에 군 장비가 지원됐다≫며 국방부를 비판한 바 있다. ≪월간조선≫의 보도에 대해 영화 제작을 맡은 장현필 감독은 ≪월간조선 기자가 영화를 보지도 않은 채 전체 83분 중 몇 분 분량의 시나리오만을 보고 영화를 마음대로 해석해버렸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포츠조선≫측은 ≪박씨의 수상 거부≫에 대해 ≪(박씨가) 수상자로 확정된 게 아니었다≫고 반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측은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박씨외 몇 명을 후보에 올렸던 것은 사실이나 수상자가 공식 확정됐던 것은 아니었다≫며 ≪실무진의 착오로 통보가 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의 해명에 대해 박씨는 ≪이럴 줄 알았다. 놀려거든 제대로 놀아라. 사무국 여직원이 내게 ≪영화평론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고 10일 오전 10시와 2시 두 차례나 전화했다. ≪11일 오후 2시 조선일보사 2층에서 평론상 시상을 한다≫고 친절하게 위치까지 알려주며 참석을 당부했다. 당시 전화는 녹음까지 되어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씨는 ≪사실 시상식 10분 전에 거부 의사를 밝히려다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두 번째 전화를 받은 지 3시간만에 ≪수상 거부≫ 편지를 사무국으로 보냈다≫며 ≪실무진의 착오라고 발뺌을 하다니? 아서라 말아라. 왜 그리 떳떳하지 못하고 조잡한 꼼수를 부리는가. 누구보다 심사위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설령 그들이 모여 입을 맞췄다해도 양심이야 속일 수 있겠는가. 싫다는 걸 싫다고 해도 바보로 몰리는 세상인가. 사람들이 왜 ≪좃선≫으로 부르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영화상 후원사인 조선일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실무진 착오≫ 해명에 ≪전화 내용 녹음되어 있다≫ 응수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www.antichosun.or.kr)는 12일 ≪수상 거부 환영 논평≫을 내고 ≪시상을 불과 하루 이틀 남겨놓고 수상자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스포츠조선≫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조선일보≫식 허위왜곡보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거들었다.

97년 ≪초록물고기≫로 청룡영화상 작품상을 받은 바 있는 명계남(이스트 필름 대표) 씨도 12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nosamo.org)≫ 자유게시판에 ≪청룡영화상을 바로봅시다≫라는 글을 통해 ≪영화인들의 수상 거부≫를 촉구했다.

명씨는 ≪영화상이란 것이 주최측과 상관없이 영화인의 축제여야 하고, 관객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청룡영화상은 외견상 스포츠조선이 주최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이상 사실상 조선일보가 주는 상이라고 봐야 한다. 청룡영화상은 동인문학상만큼이나 조선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행사이고, 문학보다도 몇 배의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진 영화이기 때문에 ≪청룡영화상≫을 통한 조선의 ≪영화인 길들이기≫를 더 더욱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작년 청룡영화상 작품상을 받은 것과 관련, ≪월간조선≫이 그해 11월호에 ≪순진한 휴머니즘으로 분계선을 넘으면 인생이 박살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라는 말을 타이틀로 달아 박찬욱 감독의 본의를 왜곡시킨 사례를 들어 ≪분단의 비극 속에 고통을 준 주체에는 조선일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힐난했다.

명씨는 ≪멀리 일제치하에서의 반민족행위부터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시녀≫ 행위, 수구기득권세력의 대변인, 탈세 등을 저지른 신문이 ≪생색≫을 내기 위해 마련한 영화제에 참석하고 수상을 한다는 것은 영화인의 자존심에 흠집만 남을 것≫이라며 ≪제작비의 절반이 마케팅에 쓰일 정도로 언론홍보의 비중이 커진 영화계가 특정언론을 반대하고 나서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영화인들의 양심과 자부심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도 청룡영화상 시상식은 12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장 해오름극장에서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동 시상식은 7시40분부터 KBS2-TV로도 전국에 생방송된다.

손병관 기자 redguard@ohmynews.com

정영일 영화평론상을 거부하며

박평식 씨가 영화제 사무국에 보낸 글 전문

스포츠조선에서 주최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제22회 청룡영화상의 정영일 영화평론상 수상자로 내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았다. 12일이 청룡영화상 시상식으로, 영화평론상은 11일에 수상한다는 것이다.

정영일 영화평론상은 대선배의 업적을 기리는 명예로운 상이지만, 2001년 대한국에서 이 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결코 기쁨만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문제는 청룡영화상을 주최하는 스포츠조선과 후원사인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이미 이 땅에 하나의 거대한 권력으로 군림하며,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처럼, 조선일보는 이미 신문의 역할과 힘을 넘어서 있다. 그들이 쌓아올린 오만과 자신을 반대하는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증오는 우리나라에 무수한 비극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벌어졌던 ≪애기섬≫ 을 둘러싼 문제는 조선일보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평등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는 소박한 심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정영일 영화평론상의 수상을 거부한다. 나의 행동이 오만한 영웅주의로 비추어지길 원하지 않으며, 글을 쓰고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작은 소망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2001. 12. 10. 박평식

국가보안법철폐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3일~4일



지금 경찰당국은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의 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 탄압에 광분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8일에는 전남지방경찰청이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 제10기 의장 최종은씨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경찰당국이야말로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파쇼폭거집단이며 한총련의 피맺힌 원수, 민주의 원수임을 다시한번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더이상 놔둘수 없는 반민주반통일악법이라는 걸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해놓고 통일을 부정하고 분열을 꾀하며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파쇼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악법인데요. 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얼마나 많은 청년학생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이 철창으로 끌려갔습니까. 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이후 지금 이 시각까지도 수많은 열혈청춘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이 국가보안법의 희생물로 되고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지난 8월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측대표단 구성원들이 구속수감됐고 얼마전에는 남총련 10기 의장 최종은씨가 철창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최근 검찰, 경찰당국이 벌이고 있는 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만행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악랄성과 잔인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반 사실은 이 살인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도 이행될수 없음은 물론이고 우리 민중의 통일염원도,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결코 이루어질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민중들 속에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존재명분을 잃었다며 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같은 현실적 요청으로부터 출발하여 한총련은 국가보안법철폐를 주되는 투쟁목표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 투쟁의 선봉에서 매진하고 있죠. 그런만큼 청년학생들은 경향각지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우선 한총련의 백만학도들은 각계민중들 속에서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민주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반민족성, 반민주성, 반통일성을 폭로하는 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려 구속된 학우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오늘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각계민중과의 연대공동투쟁을 잘 벌이는 것입니다. 당면해서 노학, 농학연대를 강화하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운동단체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해서 전반적 민주운동세력의 단결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노동운동과 청년학생운동 등 대중운동단체들에 대한 검찰, 경찰당국의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을 국가보안법철폐투쟁과 밀접히 결부해서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민주운동탄압분쇄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다시한번 과시해야 할겁니다.

검찰, 경찰당국은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구속자들을 즉시 석방해야 할겁니다. 당국이 진정으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바란다면 말로써가 아니라 희세의 반민족,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철폐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때에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죠.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이행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양심수들은 무조건 석방돼야 한다

박은철 / 구국전선 제462호, 주체90(2001)년 12월 11일



공안당국은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각종 악법을 휘두르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을 계속 탄압구속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위반죄로 근 2년간 체포투옥했던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지난 8. 15에 ≪형집행정지처분≫으로 석방하였다가 얼마 있지 않아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죄를 씌워 그를 다시 구속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8월 말에는 서울지방검찰청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하여 평양에 갔던 범민련남측본부 성원들을 ≪국보법≫위반혐의에 걸어 잡아 가두었다.

이에 앞서 경찰당국은 1998년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대표로서 평양을 방문하여 8. 15통일대축전을 비롯한 통일행사들에 참가하여 의로운 활동을 벌인 민족의 장한 딸인 황선씨를 또다시 철창 속으로 끌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2001년 1월 초에는 지난 98년 한총련대표로 방북했던 김대원씨가 ≪국보법≫위반으로 몰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월8일에는 광주, 전남총학생회연합 의장 최종은씨가 구속되고 대구 경북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의 전 의장과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많은 대학생들이 통일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철창 속으로 끌려 갔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11월13일에는 민혁당 영남지역위원장이었던 최진수씨가, 11월26일에는 한총련 전 간부 김모씨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모두를 일일이 다 꼽자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이다.

이들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죄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며 국민의 지지와 찬양을 받고 있는 애국자들이다.

이 땅에서 운동권단체들과 그 성원들이 벌이는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은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탄압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오늘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 판도에서 ≪국보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

공안당국은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반민족, 반통일 파쇼악법인 ≪국보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철폐하고 민간운동단체들의 정의로운 활동을 허용해야 하며 부당하게 잡아가둔 양심수들을 지체없이 석방하여야 한다.



2002 총학생회 당선자 ≪한총련 합법화≫에 나선다



2002년 전국 대학 총학생회 당선자들이 각각의 입장 차이를 넘어 내년을 ≪한총련 합법화해≫로 선포했다.

한총련, 학생연대회의, 전학협, ≪행동과 연대≫를 포함한 58개 대학의 총학생회 당선자들이 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학생운동 탄압 중단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2002 전국 대학 총학생회 당선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997년 이후 4년째 존속되고 있는 한총련 이적규정은 학생회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자체를 불법화 함으로써 학생운동을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보낼 항의서한을 통해 두 당이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간과할 경우 더욱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저변에서부터 담아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전체 학생운동의 장애요인인 이적규정 철회와 국보법 철폐의 큰 줄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후 계획으로 ▲민주당, 한나라당에 항의서한 전달 ▲한총련 이적규정 특별위원회 구성후 활동 ▲백서 발행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신청 ▲각 학생회의 한총련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총학생회 당선자들은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민원국에 접수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총련 외에 다른 입장을 가진 대학 당선자들도 참여키로 했으나 각자의 일정에 의해 한총련 소속 당선자들만이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각각의 입장 차이를 넘어 ≪한총련 합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07

민청학련 관련자 99명 명예회복 신청



민청학련(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포함) 사건 관련자들은 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위한 공동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와 인혁당 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정현 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이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계기》라며 《그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의 태만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또 다시 태만으로 이 사건이 묻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인 유인태씨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공동접수하며》라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중앙정보부와 육군보안사령부가 학생들을 반국가 음모자로 몰기 위해 구타와 고문으로 사건 내용과 증거들을 조작》한 것으로 사건 발생 27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구가 담긴 신청서를 들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접수하기 위해 이동했다.

한편 이날 공동 접수에 참여한 접수자는 유인태(당시 전국조직책의 혐의를 받음)씨를 비롯해 모두 99명이다.

유인태씨에 의하면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지난해 관련자들이 모여 명예회복 신청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관련법의 제한성을 문제삼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이런 법 하에서라도 명예회복을 받아내는 것이, 이후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유족들의 의견으로 재논의의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인태씨는 이번 신청을 통해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유인태씨에 의하면 이미 조작된 부분을 입증할 만한 자료 수집이 상당부분 된 것으로 전했다.

한편 이들은 오후 7시 30분 명동성당 별관에서 이 사건을 다룬 단행본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07

≪치욕의 역사≫ 모은 국보법 박물관

10일 문 연 민변의 ≪국보법 자료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역사를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는 ≪국보법 자료실≫이 12월10일(월) 문을 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개설한 국보법 자료실은 체계적인 국보법 연구에 도움을 줄 전망이나, 까다로운 열람 조건은 국보법 피해자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정빌딩 5층에 자리한 민변 사무실의 한쪽 공간. 10일 열릴 ≪국가보안법 자료실≫ 현판식을 앞두고 실무자들의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자료실 우측 하단 서고에는 54권 분량의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80년)≫의 군사재판기록이 빼곡이 들어 차있고, 좌측으로는 사노맹, 중부노동당, 범민련, 한총련 등 국보법 재판사에서 굵직한 비중을 차지했던 단체조직원들의 재판 기록(공소장, 판결문, 증인신문사항, 변론요지서, 각종 감정서 등)이 차곡차곡 정리돼있다.

국보법의 역사가 어떤 측면에서는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 자료실은 국보법 변론 및 폐지 운동에 열성적인 민변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마련됐다.

자료실 설립의 실무 총책임을 맡은 차병직 변호사는 ≪98년 민변 창립 10주년, 국보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국보법 폐지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다가 박원순 변호사(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가 ≪국보법 박물관≫을 만들자고 제의한 것이 자료실 개설의 모태가 됐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김대중 정권 출범과 함께 ≪국보법 폐지≫에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돼 ≪국보법 폐지후 ≪유품(?)≫들을 모아 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국보법 철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변에서는 ≪재판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접근이 용이한 회원 변호사들의 뜻을 모아 일단 흩어져 있는 재판 자료라도 모으자≫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지난 2년간의 자료 수집을 거쳐 10일 현판식을 갖게 됐다.

자료실에는 417건의 재판 기록들을 제외하고 국보법과 관련된 논문, 단행본, 기사, 칼럼, 자료집, 독립영화, TV토론회 테이프 등 총 1355건의 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한겨레21≫, ≪말≫ 등 진보적인 매체의 기사뿐 아니라 ≪월간조선≫, ≪한국논단≫, ≪자유≫ 등의 보수우익매체의 기사들도 열람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자료들이 대부분이어서 ≪진보당 사건(1958)≫이나 ≪인혁당 사건(1974)≫ 등 80년대 이전의 중요한 사건들까지 망라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민변은 ≪자료실의 개설이 국보법 연구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디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변 국보법위원회의 오미숙 간사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료가 1천건 정도 쌓여있지만, 자료 정리에만 매달려서는 영영 개설이 안될 것 같아 일단 문을 열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실 이용 문의는 인터넷 홈페이지(antinsl.jinbo.net)나 이메일(m321@chollian.net), 전화(02-522-7834)로 가능하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명,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보수우익 매체들의 자료도 열람할 수 있어

그러나 재판자료의 경우 열람 목적 및 신상을 반드시 밝히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다. 사실상 연구목적 이외의 일반인들의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설사 재판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도 피해자의 이름은 《김×식》의 형태로 가운데 이름을 삭제한 채 제공된다.

민변은 《피해자와 증인 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반인 대상의 전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간사는 《국보법 폐지에 동의하는 사람들간에는 《국보법 위반은 죄가 아니다. 위반자는 민주투사》라는 인식이 퍼져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밖의 사람들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보법과 관련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고, 이들이 자신의 재판 기록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공개가 관련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 기록에는 특정기간동안의 피해자들의 조직에서의 역할, 활동내역 등이 꼼꼼히 기재돼 있어 이용자가 기록들을 꼼꼼히 뒤지면 사생활이 자세히 노출될 수 있다. 민변의 한 관계자가 자료정리 작업중 지인의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고, 방대한 내용을 들춰보다가 하루 일과 시간을 다 보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전해질 정도.

또 하나의 문제는 유출된 기록의 악용 가능성이다. 오 간사는 《피해자가 재판부에 《최후진술서》를 제출하는데, 간혹 내용이 《반성문》의 성격을 띌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아무나 보게되면 문제의 소지가 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음해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 같은 까다로운 열람 조건은 국보법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사건처리 후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국보법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열람 제한은 민변 변호사들이 변론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유출, 공개하는 것이 변호사법 및 형법에 저촉될 수 있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재판기록이 떳떳이 공개되지 못하는 것은 국보법 피해자들을 경원시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분위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차 변호사는 《자료실 개설은 연구목적으로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널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박물관으로 확대 발전, 《치욕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깊다. 사진, 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도 계속 보강하고, 독재정권하의 대공분실 모형도나 고문도구 등을 갖추겠다. 재정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의 건물을 얻어 명실상부한 《국보법 박물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10일 현판식에 이어 변호사 회관 회의실에서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경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미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손병관 기자 redguard@ohmynews.com
2001/12/09 ⓒ 2001 OhmyNews

세계인권선언 53주년, 국가보안법 53년



세계인권선언 53주년을 맞아 53년 된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낮 12시, 통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인권주간 시위를 마무리 지었다.

김국상(통일연대) 투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상임의장은 여는 말을 통해 ≪인권의 날을 맞이해 돌이켜 생각해 보면 53년간 국가보안법으로 처형되거나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구속된 민족대축전 방북단과 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영세(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처절하게 싸웠지만 폐지를 내걸었던 시대착오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시퍼렇게 살아있다≫며 ≪배신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말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는 ≪미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테러 근절≫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북녘의 동포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은 ≪6. 15 남북공동선언 저지≫라는 목표 아래 노골적으로 민족의 대결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1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구속자들을 기필코 무죄석방시키고 범민련과 한총련에 씌워진 이적 규정을 분쇄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결사반대≫,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쳤다.

통일연대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선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2일은 범민련, 3일은 자통협, 4-5일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6-8일은 한총련 9일은 전국연합과 통일연대, 그리고 10일은 범민련이 돌아가며 국회앞 24시간 철야 농성을 쉼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10일간의 활동을 결산하는 자리였으나 참석인원이 많지 않고 집회 준비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자성섞인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개폐와 테러방지법 반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10

안양사랑청년회 이적규정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앞으로 야당과의 대화 속에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를 공식 방문중인 김 대통령은 현지 신문인 베르겐스 티덴데(Wergens Tidende)지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원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두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김 대통령은 또 ≪개정이 필요하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개정 전이라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와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적용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 통일뉴스)

우리는 김대중 정권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로서 김대중 정권의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일면 반가우면서도 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안양사랑청년회는 지난 99년 9월 30일 9명의 전회원이 연행되고 1년여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결국 이적단체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당시 우리 청년회는 지역에서 민중연대실천과 반미반전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 내며 지역민중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애국적인 단체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하의 공안당국은 회원들 전화를 불법도청하고 청년회 사무실 내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주인에게 청년회 사무실 열쇠를 받아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소위 ≪증거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절도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회원들을 미행하고 심지어 회원 집에까지 도둑처럼 들어와 절도행위를 하는 등 기존 그 어느 정권과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제 3년이 지나 마지막 구속자까지 만기출소하고 난 지금도 안양사랑청년회는 이적단체라는 오명을 달고 언제나 긴장과 불안 속에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단국대 조직사건, 서민노회 조직사건 등 김대중 정권 하에 자행된 조작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한총련 후배들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자식으로서, 누이로서 제 도리를 못하고 감옥으로 끌려간 경우가 허다하다. 과연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외국 신문사와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는가.

더구나 정부가 허락한 상황에 방북한 방북대표단 7명을 구속하였고 그 어느 정권보다도 양심수에 대한 사면이 적은 상황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지금도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고령의 나창순 선생님, 간경화로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구속생활을 하는 박경순 선생님을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 땅의 그 어떤 인권도 보호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국가보안법의 희생자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최대한 표명하여 반드시 임기 중에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 안양사랑청년회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조국의 통일도, 민주도, 인권도 있을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10돌을 맞이하는 2002년, 반드시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안양사랑청년회 이적규정을 투쟁으로 철회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민족공조보다 외세공조로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온 민족이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에 하나가 되어 반드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한다.
2.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피해자이며 철폐를 약속한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3. 언제나 정의를 위해 양심적으로 살아온 애국적인 청년단체 안양사랑청년회의 이적규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12월 8일
안양사랑청년회 교육실

≪한총련≫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

≪음지의 괴물≫ 국정원의 거대한 부활은 군사독재시절로의 회귀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전면 백지화하라

먼저 우리는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을 보며 미국이 기침을 하면 몸살을 앓아야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에 참담함을 느낀다. 미국이 대테러참사 이후 국내 테러방지법을 도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인도, 스페인 등 각 국에서 유사법을 제정, 강화하고 있다. 이미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빌미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 침공으로 ≪테러 대 반테러≫라는 새로운 세계지배질서로 ≪세계적 공안정국≫을 형성하며 자국에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는 이때
덩달아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미국의 대테러참사에 따른 이남의 비상경계령, 미군의 전력증강, 그리고 한국군 파병과 거액의 전쟁 분담금,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따르는 일련의 상황은 ≪대한민국은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앞에 서게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곳도 아닌 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안달이 나있는지 의문부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예방, 방지≫하여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에 대한 수사권과 정부 각 부처의 인력을 묶은 조직의 지휘권, 경찰과 군대까지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국정원이 미국의 ≪테러≫를 만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거대한 집단으로 태어나려는 음모이다. 과거 독재시절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침해의 본산지 안기부의 후신 국정원이 ≪음지≫에서 ≪양지≫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순간 21세기 대한민국이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물론 국정원은 각계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의식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독소조항을 손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조삼모사일 뿐. 테러방지법은 본질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에는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공안당국의 모호한 법적용에 의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시위형태도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며 시위단체도 테러단체로 될 수 있다. 이것이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빨갱이≫로, ≪이적단체≫로 둔갑시키는 국가보안법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더군다나 테러방지법이 몰고올 인권 침해의 위험성은 불고지죄 등 현재까지 끊임없이 위헌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제2의 국가보안법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이 전세계 희대의 악법으로 조롱받고 국민들의 가슴에서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때 국가보안법의 새끼법 테러방지법 제정은 이미 민심과 대세를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언제든지 ≪계엄령없는 계엄령상태≫를 초래한다는 데서 문제가 엄중하다. 우리 헌법은 제한적이나마 군대가 경찰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로 계엄을 예정하고 있을 뿐 계엄이 선포되지 않는 한 군이 경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무력진압을 위한 특수부대 설치를 가능케 하고 특수부대 설치권자중 국방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어 군병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계엄상황을 제외하고 군의 출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도 완전 위배된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별도의 법이 없어도 기존의 수사권으로 충분히 테러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기존의 수사권이 너무 방만하고 비대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명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테러방지법이 6・15 공동선언 발표이후 남북화해시대를 맞아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국정원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이 9.11 테러를 빌미로 사회비판세력을 제거해 사회 보수화 흐름을 장악하고 기득권을 굳히기 위한 의도라면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국정원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우익세력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과를 사죄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눈물 흘리고 있는 수지 김 가족과 같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제정될 수 없다. 한총련은 이 사회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바라는 각계 애국단체와 모든 이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 12. 11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 승 환)

≪진보≫ 풀뿌리 돌풍 어떻게 일으킬까

민노당, 자치연대, 녹색당, ≪환경후보≫ 등 후보전술



지난 8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NGO학회 심포지엄 ≪시민운동과 정치참여≫(NGO 학회-시민의 신문 공동주최)에 참석한 시민단체 인사들은 부활된 지 10년째를 맞은 지방자치제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중앙정부가 기득권을 놓지 않는 가운데 지방정치의 무대가 토호들의 ≪감투 전시장≫이 됐다는 비판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같은 지역정치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시민단체 및 진보정당들이 적극 개입해 ≪희망의 정치≫를 열어 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논의의 장이었다.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시민단체들의 지방선거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후보전술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과 유권자 운동. 전자의 경우 환경운동연합은 300여 명의 지방선거 후보를 내고 조직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각오이고, 또 다른 흐름은 녹색당을 창당해 지방선거에 대응하겠다는 그룹이다. 후자의 경우 참여연대, 경실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확고한 방침이 서 있지 않은 상태다.

환경단체 ≪논란 속에 일단 각개약진≫

8일 토론회에서 단연 관심을 끌었던 주장은 녹색당 추진 그룹의 이야기다. 그 동안 ≪녹색연합(www.greenkorea.org)≫,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등과 ≪환경 정당≫의 출범을 둘러싼 논쟁을 벌여온 이들이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시민단체들의 이목이 쏠렸기 때문이다.

차명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날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지난 20여 년간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로 참신한 이미지를 쌓아온 ≪환경운동≫이 정치에 뛰어들 시점에 왔다≫며 ≪한국 최초의 환경 정당≫의 등장을 알렸다.

차 위원은 ≪시민운동 조직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면 시민단체로서의 활동과 정치 활동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단체가 ≪무소속≫ 정치인들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당 형태의 환경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색당은 1월 초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강문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에 취임할 계획이다.

자체적인 후보군이 많지 않은 녹색당 준비그룹은 자치연대와 여성계 등 여타 사회 단체와의 전술적인 연대를 중시하고 있다. 이들의 대외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현재 녹색연합의 사무처장직 사표를 내놓은 상태)은 ≪대략 40~50명 선의 추진위원들이 위원회에 결합한 상황에서 5~7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고, 기초단위에서도 후보를 내보낼 것이다. 전체 후보자 수는 지구당 건설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녹색당≫의 출범을 지켜보는 기존 환경운동 단체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8일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식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내년 지자체 선거를 두고 정당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라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김 사무처장의 ≪환경정당 시기상조론≫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는 환경정치의 근간이 될 ≪녹색이념≫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당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주관주의나 모험주의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둘째, 당으로 가기 위한 주체역량이 없고, 셋째로, 대중적 지지가 부재하다≫며 ≪권력을 잡기 위한 정당 형태의 운동은 상당한 노력과 준비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개월에 준비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자≫며 ≪환경단체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기초의회에 주력하자≫고 제안했다.

녹색연합(www.greenkorea.org) 김제남 사무처장도 ≪녹색이념이 ≪주민자치≫에서 나온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녹색연합은 환경정당 출범을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녹색연합 관계자도 ≪6월 선거에서 녹색연합의 이름으로 출마하는 후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시민단체 ≪대선 광풍 차단에 주력≫

≪지방선거가 보수 정당들의 대선 전초전으로 설정돼서 광풍에 휘말려 지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놓일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8일 토론회)

지난 11월부터 경실련(www.ccej.or.kr)의 살림을 맡게 된 신 총장은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치르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우회적인 형태로나마 경실련 출신 후보를 출마시켰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지양하고 유권자 운동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장은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후보들의 난립 가능성과 관련, ≪각 단체들이 이미 내년 선거에 대한 대응을 세운 상태에서 선

거 나가지 말라, 통합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각 개약진을 하는 중에 최소한의 조정을 위한 촉구를 하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역할≫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진 총장은 ≪제대로 된 정강, 정책을 가지고, 거기에 집단들이 모이는 정당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시민단체들이 총집결, 적극적인 낙천, 낙선 운동을 펼쳤던 2000년 총선연대의 활동은 기대하기 힘들다. 당시 참여했던 단체중 일부가 후보로 나서는 상황에서 2년 전과 유사한 낙선운동을 펼친다면 시민들이 안 좋게 생각할 것이다≫라며 ≪아직 구체적 활동계획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광역단위에서 상징적인 지역 1~2군데를 선정해 금품 살포 등을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전국 100여곳에 후보낼 예정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진보진영의 정치 세력화 움직임은 민노당과 지방자치개혁연대 등의 약진 가능성이다.

우선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www.kdlp.org, 이하 민노당)은 25명의 지방 의원과 단체장을 포함, 70-80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당 정책위의 관계자는 ≪민주노총(이하 민노총)과도 연대, 민노총계 후보들까지 포함하면 1백여 명이 출마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부산시장 후보로 김석준 시지부 정책위원장(부산대 교수)이 선출되는 등 민노당은 내년 2월 말까지 각 단위별 후보 선출을 완료할 계획인데,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장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이다.

내년 2월20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만이 결정된 가운데 김창현 전 동구청장과 98년 선거에서 석패한 송철호 변호사가 당내외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전략지구≫로 특화된 울산과 달리 여타 지역에서는 민노당의 ≪친노동자≫ 이미지 탈색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12월 중 서울시지부가 주최하는 선거토론회가 추진되고 있고, 인천시지부 역시 민노총 인천본부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선거 공동대책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현직 구청장인 울산의 조승수 북구청장과 이영순 동구청장이 재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또 권영길 대표가 지지기반을 다져온 창원에서는 이재구 창원을 지구당 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당원 투표를 통해 시장후보로 결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민노당에 비해 사회당(www.kypp.or.kr)은 다소 느긋한 자세다. 원용수 대표가 창당 3주년 기념사(11.29)에서 ≪2002년 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이다.

이은영 부대변인은 ≪서울, 인천, 울산 등 유의미한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후보 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12월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연대, ≪무소속 돌풍≫ 일으킬 수 있을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려는 그룹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독식 구도를 청산하려는 지방자치개혁연대(이하 자치연대, www.local.or.kr)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후보를 내 ≪무소속 연대≫의 출사표를 던진다는 계획이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영남 지역이다. 김두관 남해군수가 ≪경남자치연대≫의 깃발을 들고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뜻을 표명했고, 남해, 함양, 합천 군수 선거와 진주, 산청 등 서부 지역에서도 기초의회 후보를 상당수 출마시킬 방침이다. 이재용 대구남구청장도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11월28일 발족한 광주전남자치연대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에 각각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한때 J씨가 광주시장 후보로 거명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는 분위기다. 자치연대는 ≪지자체 선거만큼은 새로운 인물을 원한다≫는 지역여론을 등에 업고 민노당, 전국연합과의 공동 후보를 추진중이다.

지난 1일 내부사업설명회를 가진 한국청년연합회(KYC, kyc.or.kr)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초 및 광역 의회 선거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대선이나 총선의 전초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타 단체들과 달리 지난 3년간 실시한 15회의 지방자치아카데미에서 보듯 지역자치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다고 자부하고 있다.

≪KYC 후보≫라는 브랜드로 20-50인의 무소속 후보를 출마시킬 계획이나 별개의 선거 준비를 하는 진보정당, 사회단체들과의 ≪교통정리≫도 모색하고 있다. 지역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천안KYC의 장기수 씨는 ≪민노당에서도 출마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상정하고 있어 현지 지구당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동운동의 양대 산맥≫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준비 과정에서 전혀 상반된 모습을 띠고 있다. 민노총은 민노당을 통해 후보들을 출마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굳힌 상태다. 최순회 민노총 정치국장은 ≪민노총이 민노당을 창당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 동안 양자간의 공조도 긴밀하게 이뤄져 사실상 민노당 후보가 민노총의 이해도 함께 반영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 2월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노총(www.fktu.or.kr)은 지방 선거 이슈가 상대적으로 뒷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의 대의원 설문조사에서 ≪독자후보를 내자≫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궁극적으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한국노총 내의 여론은 민노당의 ≪모든 기득권을 버린 재창당≫ 방침과 맞물려 진보진영 정치세력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손병관 기자 redguard@ohmynews.com

이회창 제거하고 남북협력 활성화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4일~6일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좋게 진전되던 남북관계가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역적들의 훼방으로 교착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민중들속에서는 남북관계를 활성화하려면 이회창과 그 패당을 정계에서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윤정원씨 모시고 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급격히 높아진 겨레의 통일열기가 새 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고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분위기도 비상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나라당의 이회창은 남과 북사이의 화해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해서 남북간의 협력분위기를 깨고 남북관계를 첨예한 대결상태로 몰아가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어서 각계의 분격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볼까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윤정원 :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겨레의 통일열기가 비상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분야에서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고 있어요. 21세기의 첫해인 올해에 들어와서도 이북에서는 2001년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고 그 이후 남북화해협력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서 그것을 통일의 디딤돌로 되게 하려는 건 겨레의 일치한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회창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냉전시기로 돌려세우기 위해서 아주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죠.
사회자 : 네, 6.15공동선언자체를 반대하면서 온갖 험담을 다한 이회창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이 걸고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윤정원 :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이회창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줄곧 상호주의를 떠들었고 또 북한불변론과 속도조절론을 ***유포시키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집요하게 막아나섰죠. 다시 말해서 북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남측만 북에 퐉퐉 퍼주기하고 있다는거죠. 최근 이회창이 북에 대한 무슨 지원을 들고 나왔던 것은 그가 남북사이의 화해협력과 민중들의 생활에 관심있어서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마시키려는데 있는거죠. 지금도 그는 기회있을때마다 일방적 양보불가론, 북한퍼주기를 떠들며 온갖 못된 짓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건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를 극구 대립격화로 몰아가려는데 있는거죠.
사회자 : 그래서 지금 경향각지에서는 이회창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남북협력이 활성화될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윤정원 :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될수 있지만 우선 그가 극악한 남북대결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들고 있는 이른바 북한불변론을 봐도 그걸 잘알수가 있죠. 이북에서는 남북관계를 불신과 반목에서 신뢰와 협력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거든요. 금강산관광과 장전항개방, 또 지난 시기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들이 북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북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변화가 있기 마련이죠. 70여년동안에 왜곡날조된 반공선전의 허구성이 드러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공연북의 길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변하지 않은 건 이회창의 반북대결론입니다. 이북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서까지 북을 걸고 드는 것은 그가 얼마나 남북대결에 혈안이 되어 있느냐 하는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회자 : 네, 그렇죠. 이회창이 떠드는 속도조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6.15공동선언이 실천되려면 남과 북이 각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치죠. 지난 시기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을때나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했을때 그 실천*******못한채 남북관계가 냉각된 경험을 떠올려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반세기이상이나 분단의 비극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과 북의 겨레가 서로 불신과 대결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회창은 오히려 속도조절을 떠들며 남북사이의 협력에 제동을 걸고 있는 건 그가 대결과 긴장격화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정원 : 이회창이 떠들고 있는 퍼주기라는 것도 결국 ****에 지나지 않죠. 그가 북에 퍼주기를 한다고 기염을 토하지만 실제로 퍼주기를 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북이예요. 북에서는 남에 금강산을 내줬고 어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제기했어요. 또 공단을 건립하도록 다시 말해 땅까지 내줬어요.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회창은 이에 대해서는 모른체 하고 있으면서 북에 대한 얼마간의 지원에 대해 온갖 험담을 다하고 있는걸 보면 참으로 분격을 금할수 없죠.
사회자 : 그렇습니다. 이회창과 같은 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이 원만히 진행될수 없죠. 그런데 이회창을 제거해야할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이회창을 그대로 두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는 주되는 요인의 다른 하나는 바로 그가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얘기됐지만 그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북에 대한 퍼주기라는 것은 *********. 이회창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겪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드는 것은 북에 퍼주기때문이라고 악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실제로 퍼주기하는 것은 이북이 아니라 미국의 군수독점체거든요. 아시다시피 오늘 국민혈세를 미군수독점체에 바치면서 미국의 전쟁장비들을 줴다 끌어들이고 있는게 이땅의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지난 95년 무려 3년동안에만도 ***********************. 이것이 한국경제와 민생에 얼마나 ********어렵지 않은거 아니예요. 그러나 이회창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미군무기구입을 음으로, 양으로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내외의 **와 배격을 받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유독 이회창패당이 적극 지지해 나서고 있는 건 그 하나의 사례죠. 지금 국민각계에서 반이회창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회자 :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은 물론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회창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회창은 남북대결의 와중에서 우리 민족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하고 있습니다. 각계민중은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미국의 등에 업혀 권력욕을 이루어보려는 이회창을 역사의 쓰레기장에 매장해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이회창과 그 패당이 아무리 통일을 막으려고 훼방을 놀아도 통일은 민심이고 대세의 흐름입니다. 대세의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할겁니다.

보람찬 투쟁의 한해

김윤식 / 한민전 평양대표부 시사레포트, 주체90(2001)년 12월



대망의 새 세기, 21세기의 첫해가 저물고 있다.

세말의 언덕에서 투쟁으로 점철된 올해의 나날들을 되돌아 보는 민족민주진영의 감회는 새롭다.

올해 우리의 민족민주운동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에 의해 엄중한 장애에 직면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이남의 각계민중은 6.15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여 민족민주운동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룩하였다.

민족민주운동의 실상

민족자주를 위한 반미투쟁

올해 이남에서는 각계민중 속에서 민족자주의 기운이 전례 없이 높아가는 가운데 반미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6.15선언의 이행을 못마땅해 하면서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에로 되돌리려는 부시행정부의 책동에 분격을 금치 못한 이남민중은 미군철수구호를 전면에 들고 모든 반미투쟁을 이에 지향 시켰다.

범민련남측본부와 전국연합, 한총련, 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들과 각계민중이 과감히 벌인 미국의 반북고립압살책동과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반대한 투쟁, 그리고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 등 10여 개의 반미 투쟁단체들이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경향각지에서 반미투쟁을 고조시킨 것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미군범죄를 폭로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현장으로부터 미군기지철폐를 위한 투쟁장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반미투쟁전선에서는 ≪미국놈을 몰아내자≫, ≪양키는 제집으로 돌아가라≫,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구호가 높이 울려 나왔다.

이남민중은 미군철수를 겨냥한 반미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그 무대를 넓히기 위한 활동도 적극화하였다.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 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남측본부가 해외본부와 함께 올해 6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을 열고 트루먼 이후 부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통령들과 국무장관, 각급 정보기관의 책임자, 주 한미군사령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살인마 미국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서 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남민중의 반미투쟁은 민족자주가 없이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에 입각한 것으로서 그것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야 말려는 굳건한 의지의 발현이다.

민족자주를 위한 반미투쟁이 민족민주운동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중심기조로 된 것은 올해 이남민중의 투쟁에서 달성된 주목되는 성과로 되고 있다.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

이남민중은 ≪보안법≫을 반민주, 반통일악법으로 낙인하고 그 철폐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했다.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전국연합을 비롯하여 여러 인권단체들과 종교단체들, 각계민중이 민족자주와 함께 민주화도 6.15선언이행의 전제가 된다는 관점에서 ≪보안법≫철폐투쟁의 파고를 높임으로써 광범위한 대중의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운동의 방향성을 올바로 틀어쥘 수 있었다.

6.15선언이행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고있는 수구보수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도 강하게 벌였다.

노동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와 시민단체들, 사회활동가 등 광범위한 대중은 동족사이의 반목과 대결에 광분하여 동조를 부정해 나서는 이회창일당을 비롯한 수구분열주의자들의 준동을 매국과 분열을 추구하는 망국적인 작태로 단죄규탄하면서 그것을 반대 배격하는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이북과의 연대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어졌다.

남북간에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는 공간을 이용하여 많은 운동 단체들이 방북대표단을 파견하여 대중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냈다.

남북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금강산에서 만나 나라의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민중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주목되는 사태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민족민주운동에서 주목되는 점

투쟁구호를 바로 든 것이다.

이남민중은 6.15선언의 이행을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좌표로 설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의 책동에 대응해 주한미군철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대북강경정책반대 등 투쟁구호를 듦으로써 반미를 주선으로 틀어쥐고 이 투쟁을 대중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게 했다.

또한 6.15선언이 이행단계에 있는 정세발전의 요구에 걸맞게 ≪보안법≫철폐투쟁의 파고를 높임으로써 민주화를 위한 이 투쟁이 결실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전개되게 했다.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에서도 6.15선언의 이행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통일운동이 대중성을 기할 수 있었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투쟁이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다수의 운동으로 전개된 것이다.

노동자, 농민들은 변혁운동의 주력으로서 6.15남북공동선언관철에서 선두에 설 것을 결의하고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연합공동투쟁에 적극 나섰다.

청년학생들은 각계민중과 굳게 손잡고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이 고조되는 속에서 통일연대와 실천연대, 민중연대를 비롯하여 반MD연대, 국보철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 주미철연대 등 크고 작은 연대연합조직이 속출했다. 이것은 민족민주운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올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이남민중의 투쟁에서 달성된 이러한 성과들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그것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가져온 자랑찬 결실이다.

그러나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투쟁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지금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과 그에 추종하는 이남의 반통일세력의 분열책동으로 말미암아 정세는 엄혹하고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시국은 민족민주진영이 내외분열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고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이룩할 것을 요청하고있다.

이남민중은 격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6.15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국면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온 민족이 단합하여 3자공조를 분쇄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7일

이 해도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세말의 언덕에서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봅니다. 금년에는 6.15공동선언발표 1돐이 되는 해로, 참으로 가슴 벅찰 정도로 통일관련 대화들과 행사들이 금강산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좋게 진전되던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최근들어 급격히 감퇴해가지고 통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겨레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통일관련사업들이 이처럼 부진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건 전적으로 우익보수세력들과 반통일분자들이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기로 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배치되게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와 한가지로 어울려서 놀아나기 때문이라고 할겁니다. 네, ≪온 민족이 단합하여 3자공조를 분쇄하자≫ 논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일씨입니다.

전 세계를 경탄시킨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어언 1년 6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민족사적 사변앞에서 우리 7천만 겨레는 물론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커다란 감격과 기쁨, 환희에 휩싸여있었고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어 나라의 자주통일이 하루빨리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540여기간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7천만 겨레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으며 그 위대한 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참으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과정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힘을 합치면 못해낼이 없다는 자신감, 조국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 민족의 대단결로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했었다.

반면에 6.15공동선언이행과정에는 시련과 난관, 장애도 많았다. 돌이켜보면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려는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려는 온갖 책동이 지속되어왔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민족의 단합을 저해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극우보수세력과 반통일세력의 범죄적 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고 있고 그것이 외세와의 공조속에 엄중한 단계에로 치닫고 있다.

21세기 첫해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민족통일대토론회와 남북농민통일대회,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이 성황리에 열리고 온 민족의 통일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에 당황한 극우보수세력과 반통일세력이 외세에 추종하여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당국자들이 부시미행정부와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한미한일간의 접촉을 통해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대북공동**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6.15공동선언실천을 방해하기 위한 한미일 3자공조가 완전히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있음을 그대로 웅변해주고 있다.

실제로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미국, 일본등은 겉으로는 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뒤에 돌아앉아서는 공동선언이행을 비방하고 통일을 방해하면서 한미일 3자공조로 대북정책을 펴나가기로 하고 대북적대시정책과 반북강경책동에 박차를 가해왔다.

오늘 한반도정세가 격화되어 전쟁위험이 증대되고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신, 대결이 조장되고 있는 것도,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이 난관과 장애에 부딪쳐 지연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다름아닌 한미일 3자공조의 범죄적 책동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외세의 대북정책과 강경책동에 따라 당국자들이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여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게 결렬시킨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미일 3자공조야말로 민족의 단합을



저해하고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는 걸림돌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사태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중시키고 동족사이의 대결을 조장하며 민족의 영구분열을 획책하는 한미일 3자공조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도, 민족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현 시기 조성된 정세는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인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침략과 예속, 전쟁과 분열, 매국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는 한미일 3자공조를 분쇄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온 민족이 단합하여 한미일 3자공조를 분쇄하는 여기에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길이 있다. 아시다시피 외세에 의해 갈라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따라 조국통일을 실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좌우되는 만큼 조국통일위업은 오직 그 담당자인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주인으로써의 역할을 높여야만 이룩할수 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인 조국통일은 남과 북의 어느 한 지역이나 개별적 당파, 어떤 특정계급이나 계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 단합된 힘과 주체적 역량에 의거해야 할 전민족적 성격을 띤 자주위업이다. 따라서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마음과 뜻, 지혜와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필수적 요구로 나서게 된다. 더욱이 오늘 21세기의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것은 또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극력 방해하고 있는 3자공조를 깨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밑에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뭉쳐 연대연합을 강화발전시켜나갈때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은 더욱 강화되고 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된다.

금강산과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토론회와 남북농민통일대회,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남과 북, 해외 온 민족의 단합에 통일의 장애를 제거하고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는 민족의 힘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 나날에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과 북, 해외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해 나간다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고 민족공동의 목적, 조국통일을 위해 마음과 뜻, 지혜와 힘을 합칠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에 토대해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통일의 *에 드리워진 한미일 3자공조를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해야 하며 그러자면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정당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이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면서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또한 애국애족의 기치, 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등 온갖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대단결을 이룩해야한다. 이와 함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부르짖는 극우보수세력과 반통일세력의 범죄적 책동을 짓부수며 나아가서 한미일 3자공조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정당단체들과 각계층 동포들이 온갖 계기와 가능성을 이용하여 조직별, 계층별로 연대하고 쌍무적, 다무적 연대를 실현하고 여러 가지로 통일연대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갈때 온 민족의 단합이 실현되며 그 힘은 막강한 것이다.

민족자주의 기치,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우리 7천만 겨레의 단결된 힘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한미일 3자공조를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네, ≪온 민족이 단합하여 3자공조를 분쇄하자≫ 오일씨의 논설을 보내드렸습니다.

민족공조에 통일의 길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반통일세력들의 한미일 3자공조에 각성을 가지고 대하며 제때에 타격을 가해야 하겠죠.



조직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5일~7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아시다시피 지금 한총련을 비롯한 민주운동단체들에 대한 검찰, 경찰당국의 탄압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세는 학생운동으로 하여금 조직적 결속을 더욱 강화해서 파쇼당국의 탄압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갈걸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해 얘기 좀 나눠보자고 자리 같이 했는데 먼저 조직력강화의 필요성이라 할까 그에 관해 말씀해주시죠.

김현규 :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만학도의 조직적 결속을 강화하는 건 현 시기 날로 횡포해지고 있는 검찰, 경찰당국의 탄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학생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주성을 위한 모든 대중운동은 단결로부터 시작되고 단결된 힘에 의해 전진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학생운동 역시 투쟁의 닻을 올린 그날부터 학생대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여왔던 거구요 또 단합된 힘으로 투쟁의 길을 앞장에서 달려왔습니다. 이처럼 학생운동이 발전하는데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중대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학생대중의 조직적 결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학생운동에 대한 검찰, 경찰당국의 파쇼적 탄압이 횡포해질수록 조직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대중의 조직적 결속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것이 필수적 과제로 나서는 겁니다.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중운동발전의 견지에서 학생운동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조직적 결속면에서 불미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운동 일각에서는 투쟁노선상 그리고 운동전술상 견해차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직적 단합에 저해를 주는 종파주의적 경향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하면 한총련 지도부가 현자공동투쟁노선에 대해 지나친 정치투쟁이라느니 뭐니하는가 하면 일부는 그 무슨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을 운운하며 학생운동이 학내문제나 지역문제, 환경문제같은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런가하면 일부 학생들속에서는 파쇼당국의 한총련탄압책동에 단결해서 반격을 가할 대신에 당국의 사주하에 한총련과 대체할 새로운 학생조직을 내오려고 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운동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투쟁에서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고립분산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죠.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학생대중의 조직적 결속을 강화하는건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생운동에 대한 파쇼당국의 탄압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우심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학생운동이 하루빨리 조직적 결속을 이룩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반미자주화, 조국통일운동에서 선봉대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백만학생대중의 조직적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그에 관해 생각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김현규 : 그에 관해서는 많은 걸 얘기할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한총련의 기층조직들을 튼튼히 꾸려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운동의 기층조직들인 과, 단과대학생회들과 동아리들을 명실공히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전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학생대중조직으로 되게 해야하고 전투적이고 기백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회자 : 그리고 말이죠. 학생대중의 조직적 결속을 이루자면 학생운동내부의 분열현상을 하루빨리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학생운동핵심들은 주체의 변혁운동이론으로 학생들을 더욱 철저히 정신무장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통일, 이념통일, 조직통일을 시급히 이뤄내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의 조직력과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온갖 분파주의적 경향과 요소들에 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할겁니다. 그러자면 청년학생들이 단결하면서 투쟁하고 투쟁하면서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운동조직들은 의견상이는 뒤로 미루고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투쟁에서 공동의 투쟁목표를 제기하고 함께 투쟁을 벌여나가며 이 과정에 신뢰를 확고히 하고 단합을 이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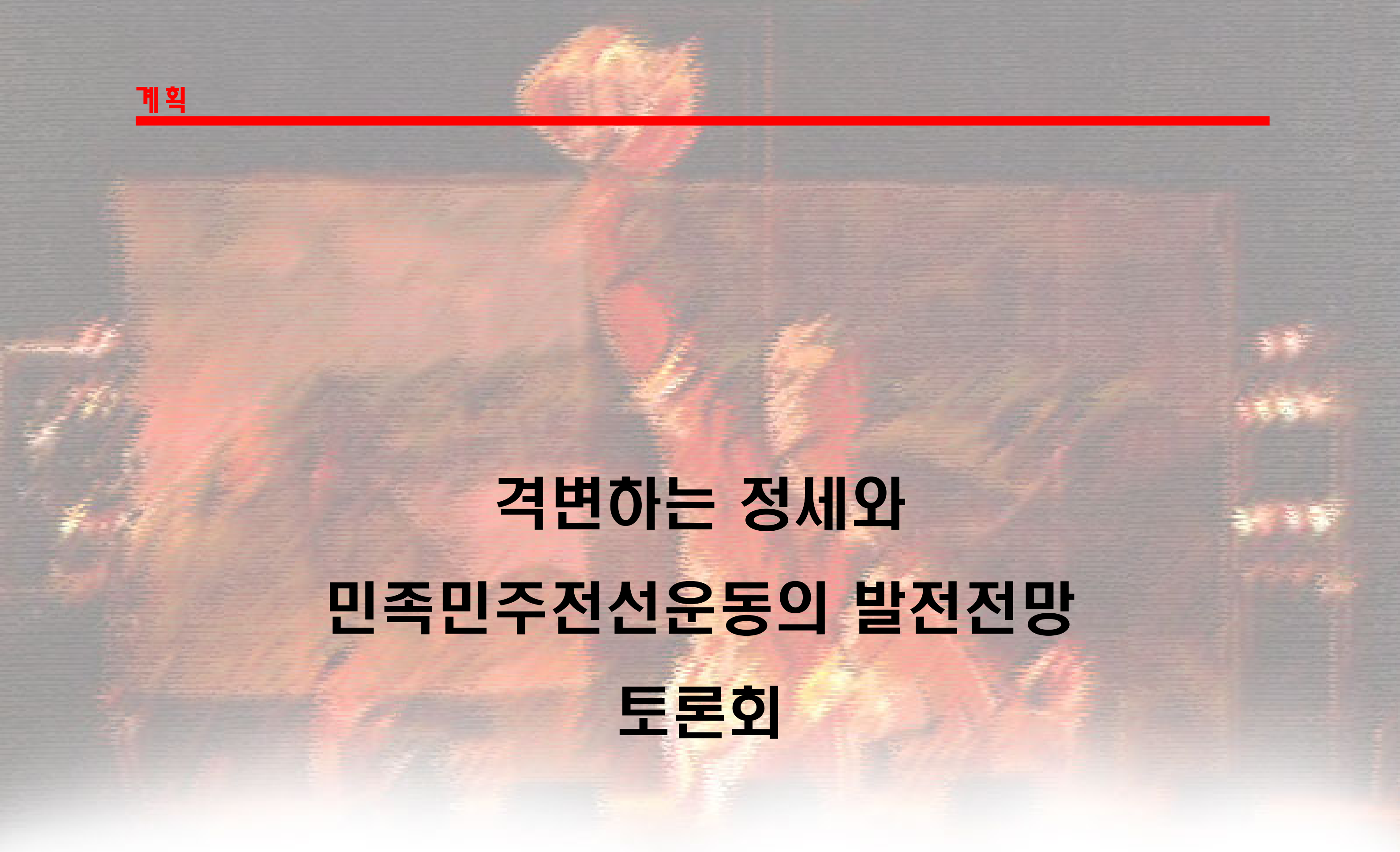
사회자 : 오늘 학생운동대오의 조직적 결속을 이루려면 한총련을 중심으로 해서 백만학도가 굳건한 단결을 실현해야하죠. 왜냐하면 한총련이야말로 시대와 민중의 지향과 백만학도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청년학생들의 대표조직이기 때문이죠.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한총련은 명실공히 학생운동의 사령탑, 백만학도의 결집체입니다. 지금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민중이 한총련을 겨레의 희망으로 찬양하며 그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총련은 백만학도의 조직적 결속의 구심체로써의 자기의 중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조직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특히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학생운동단체들과 조직적 단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회의 민주화와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을 국민, 학생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걸맞는 올바른 투쟁전술과 방법들을 창출, 구사해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청년학생들은 사상이나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해서 한총련의 깃발아래 굳게 뭉쳐 단합된 힘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사회자 : 그럼 학생운동이 시대와 각계민중의 요구에 부응해 반드시 조직적 결속을 이루고 민족의 자랑으로 더***기를 바라며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네, ≪조직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렸습니다.



격변하는 정세와 민족민주전선운동의 발전전망 토론회

취지

-. 2001년 한해를 정리하고, 전국연합 10주년을 맞아 전체 운동진영과 함께 그동안의 전선운동에 대해 평가해 보고 향후 발전전망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를 통해 민족민주운동전체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운동진영 전체와 공유하는 것과 함께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전망에 대한 일치를 높임으로써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한다.

주최

-.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1년 12월 14일 금요일 2시

-. 장 소 : 기독교회관 신관(2층 중강당)

개요

-. 토론회 제목 및 주제 : ≪격변하는 정세와 민족민주전선운동의 발전전망≫

-. 토론회 기조발제와 토론자를 각부문의 의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다.

-. 사회 :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 토론회 기조발제(전국연합 : 오종렬 상임의장)

-. 토론자 : 권영길(민주노동당), 허영구(민주노총), 정광훈(전국농민회총연맹), 이종린(범민련남측본부), 전국민연합, 한총련, 노동자의 힘

-. 토론내용

①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평가

② 향후전선운동에 대한 의견

③ 민중연대, 통일연대 강화에 대한 입장

④ 2002년 양대선거와 전선강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절정에서 빛나신다

홍문수

세월의 갈피를 다 번져보아도
총소리
포소리 한방 없이
달려 드는 100만 대적을 주저 앉힌
우리 장군님 같은 령장은 없었노라

력사의 구석구석을 다 찾아 보아도
손길 한번 높이 드시여
겹쳐 든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장군님 같은 위인은 없었노라

전설속에도 없었노라
신화속에도 없었노라
어느 시대의 누구이든
경애하는 그이앞에선 모두다
산악앞에 모래알
대양과 실개천의 차이

아니
태양과 초불과의 차이가 있었나니

분은 물론 초까지 쪼개 쓰시면서도
철없는 어린애의 편지에도
회답을 잊지 않으시는
한없이 자애 깊은 그 심장을
어느 누가 지닐수 있었으며

헝크러진 세상의 난문제들에
일일이 해답을 주시는
그 예지로움이
어느 누구에게 있을수 있었으랴

사상과 령도의 절정
인덕과 담력의 절정
절정에 모실 위인이 없어

인류가 지금껏 비워 두었던 그 상상봉에
우리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빛나신다

행복하여라
그이품에 운명을 맡긴 민족이여
영광이여라
그이를 태양으로 모신 21세기여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그이께선 그 절정에서 빛을 뿌리시며
인민을 찾아 쉬임 없으리라
자욱자욱 세계의 시선을 모으시며
자욱자욱 세계를 경탄시키시며

주체 90, 12월 3일

서울 종로구에 사는 모기업사장 이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정치의 대가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비롯한 주한미군철수국민행동본부, 통일애국열사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서총련소속 대표들이 지난 1일 서울 용산미군기지앞에서 6.15공동선언이행 가로막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철회와 당국의 비상경계조치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행동의 날에 즈음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어민총연맹 등 40여개 노동자, 농민, 학생단체소속 회원 1만 5,000여명은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민중집회를 열고 쌀수입개방저지와 자유무역협정체결반대, 주5일근무제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교원정년연장에 대해서 학부모의 70%가 반대하고 있으며 교원들도 반대의견이 52%로 찬성의견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각계에서 교원정년연장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어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타≫가 지난달 28일 각계층 민중 1,530명을 상대로 ≪이회창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따르면 응답자의 87.9%가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이회창은 하루빨리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응답자의 10.3%정도만이 지지한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써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는 반통일분자, 남북대결을 고취하며 전쟁열을 고취하는 민족반역자라는 것, 이회창애비의 친일행적과 이회창자신의 친미사대주의적 행위 그리고 법관시절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등을 들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일본당국의 조총련에 대한 파쇼적탄압행위를 규탄해 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12월 4일

민주노총소속 노조원 김준성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이북을 노동자들의 천국으로 찬양했습니다.

6.15공동선언 방해하는 미국의 긴장고조반대,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결의대회가 11월 25일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미국 주재 일본대사가 이북을 걸고들며 주제넘은 발언을 망탕 늘어놓은 것을 규탄해 11월 30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138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인사 1,560명은 지난 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창립대회를 갖고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조가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하면서 3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노조가 지난주에 이어 3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두시간씩 파업을 벌이고 6일부터 이틀동안은 주간 4시간, 야간중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민련의 김종필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각제로 제도를 바꾸고 퇴임할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면서 자기가 거기에 한번 참가해보려 한다며 대권도전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유신본당으로써 역사와 국민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김종필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국민을 우롱모독하는 행위로 각계의 강력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기장군 **마을 해변에서 선박 ****을 벌이던 육군 모부대소속 군용트럭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 이 부대소속 22살 전모소위가 숨졌습니다.

일본 수사당국이 11월 30일 조은도쿄도신용조합에 대한 강제수색을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일본 수사당국은 이날 오전 10시경에 24명의 수사관을, 오후 13시경에는 15명의 인원을 추가동원해 조은도쿄도신용조합본점에 대한 수색을 무려 8시간이상이나 감행했습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일본 수사당국은 지난 11월 8일 이곳 조합에 대한 강제수색놀이를 벌였습니다.

일본 수사당국은 조은에 대한 수색의 범위를 넓히면서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리석은 기도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러시아고려인통일연합회는 일본이 최근 조총련본부와 지방본부를 강제수색하고 체포소동까지 벌여놓은 것과 관련해 1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12월 5일

부산시 수영구에서 살고 있는 최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2일에 진행된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먼저 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의 주최로 2일 서울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빈민 등 각계층 민중들의 참가하에 쌀수입개방반대, 신자유주의구조조정저지, 민중생존권쟁취, 반전평화, 미국반대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세계 인류는 미국의 패권정책으로 해 경제적 압박과 함께 언제 어디로 확대될지 모를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민중대회는 이러한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민중생존권을 비롯한 진정한 민주개혁을 쟁취하며 미국의 패권정책의 산물인 신자유주의세계화와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요구하는 투쟁의 자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민중대회에서 미국과 정부를 대상으로 11개항의 요구사항을 명백히 밝히게 된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당국이 민중들의 피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오전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장차관이 참석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계가 철도청 등 5개 국가기간사업의 민영화추진에 반발해 파업을 단행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노동계의 합법적인 권리인 파업권의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이를 공권력을 투입해 탄압하기로 한 것은 도저히 정당화될수 없는 것입니다.

판사시절 수많은 애국적 인사들에게 사형,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한 애국적인 인사들을 탄압,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이회창을 국민의 심판대에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야인사 최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지난 60년대초부터 서울지방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판사, 부장판사, 대법원판사 등을 해먹으면서 민주와 통일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에게 극형을 선고하는 등 애국민주세력 탄압에 광분한 파쑈분자이다. 악명높았던 군사독재정권들의 하수인이 되어 파쑈악법을 마구 휘둘러 댄 교형리가 아직 청산되지 않고 활개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정치인의 자격도 없는 이회창이 지금은 대통령까지 해먹겠다고 혈안이 되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만일 이회창이 권좌를 차지한다면 군사독재정권들보다 더한 파쑈독재를 실시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회창을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조사, 고발해 그를 국민의 심판대에 내세워야 한다.≫
민가협의 한 관계자는 이회창은 대법관 모자를 쓰고 5.18광주민중봉기자들을 감옥으로 보낸 파쑈주구라며 분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이회창의 죄악을 작성해 공개하고 사법기소해야한다. 군사독재의 청산과 함께 처단됐어야 할 이회창인데 어떻게 아직 살아남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 분통이 터져 못 참겠다. 이회창일족은 3대에 걸쳐 애국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온 역적들이다. 이회창을 그냥 둔다면 후손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회창을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잡지 ≪백두-한라≫ 11호를 발행했습니다.

재독일동포협력회가 조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행위를 규탄해 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남측의 불순한 태도로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한채 결렬된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주체 90, 12월 6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12월 5일 이북 주재 러시아연방 안드레이 까를로브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셨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해직언론인 김모씨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한민전 대변인은 5일 성명을 내고 조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의 주최로 쌀수입개방반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 민중생존권쟁취, 반전평화, 미국반대 전국 민중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등 영호남지역에서 모인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대표 등 3만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민주노총과 전농, 전국빈민연합, 한총련대표들이 연설했습니다.

광주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남총련의장 최종은씨를 비롯한 학생, 노동자, 재야인사, 양심수들이 3일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범민련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완전철폐할 것과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군은 즉각 물러갈 것, 양심수들의 대우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국무조종실 등 관련부처장차관이 참석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계가 철도청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추진에 반발해 파업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웨덴신문 ≪트룰 *** ***≫호가 미국과 이남당국의 반동책동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재미운동단체협의회가 일본당국의 조총련에 대한 탄압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1월 30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창광유치원에 유희기구들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을 반대규탄하는 사리원시군중집회가 5일에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는 일본당국이 조총련에 대한 전대미문의 파쑈적 폭거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5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12월 7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가 보안법폐지와 범민련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사회보험노조가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의 노조측과 사측간에 합의된 조항의 이행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농업경영인협회 해남군소속 농민들은 6일 오전 해남읍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농협에 쌀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정부에 의료지원단과 연락장교단파병을 요구한데 이어 해군과 공군 수송단파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측이 외교경로를 통해서 4,300톤급 대형상륙함 1척과 ≪씨-130≫ 수송기 4대, 승무원 등 관련인원 320여명을 파병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6일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아침에 정책을 정해놓고 저녁에는 뒤집는다고 비판한뒤 자민련과 한나라당과의 공조는 더이상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두 야당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은 한나라당이 대전에서 연 대규모행사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야당의 공조붕괴로 한나라당의 자민련와해기도와 자민련의 *****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결이 격화될 예정입니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는 요즘 구조조정중단 목소리가 있지만 한국경제는 경제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이 2차 세계대전당시 군위안부제도를 운영한 일본정부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